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57-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통계청
통계개발원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간사

2015년 9월에 있었던 제70차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논의, 채택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의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SDGs 달성은 2030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이제 3분의 1 지점이 되는 2020년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을까요?

올봄 유난히도 미세먼지로 인해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자랑하던 한국의 사계절은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우리가 누렸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유튜브 영상 속에서만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통계청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머리를 맞대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표입니다. 이에 UN 통계위원회에서는 SDGs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론이 미숙한 지표도 있고,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데이터가 없어서 모니터링이 어려운 지표도 다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통계청은 SDG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투명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SDGs 이행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떠한지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역량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SDGs 이행현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통계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표와 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SDGs가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아낌없이 자문의견을 보내 주신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통계개발원 원장 전영일

차례

1장 • **개요** 5

2장 • **SDGs와 데이터** 7

3장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11

4장 •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13

5장 •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57

6장 • **맺는말** 71

참고문헌 72

주요 용어 약어 73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75

지표 총괄표 76

1장

개요

1. 배경 및 목적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1] 이 의제 안에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다. SDGs 채택 이후, UN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SDGs를 이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8년 12월 말 K-SDGs(Korean SDGs)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 확정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된 K-SDGs는 2020년에 1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통계청은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UN의 지표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글로벌 지표[2]에 대한 국내의 통계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는 K-SDGs 지표 선정 작업의 토대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UN에서 선정한 232개 지표를 근간으로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글로벌 지표 산출에 필요한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232개의 지표 중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절반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proxy) 통계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수준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3]

2. 구조

본 보고서는 개요와 맺는말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SDGs 채택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SDGs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데이터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현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SDGs 이행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통계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3. 의의

본 연구는 17개 목표 모두를 망라한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각 목표의 소관기관에서 SDGs 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있다. 이는 그 대상이 물, 교육, 건강 등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SDGs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7), 이행현황 모니터링(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정비 및 국내 통계 파악(고경환 외, 2016; 장은하 외, 2017) 등으로 다양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등 일부 국제기구 또한 정책지원을 위해 회원국의 SDGs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있다(OECD, 2017; SDSN, 2018). 그러나 국제기구의 특성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지표 종류 및 수,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곧이곧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을 투영하여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

1 채택문 정식명칭은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본 채택문은 서문, 선언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조치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지표는 UN에서 선정한 SDGs 지표를, 국가 지표는 글로벌 지표를 근간으로 국가적 상황에 맞게 조정된 지표를 의미한다.

3 데이터란 조사 또는 실험의 관측결과 얻어진 개체의 특성값들을 말한다. 개체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통계학에서는 수량적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흔히 통계적 데이터(Statistical data)라고 부르기도 한다(한국통계학회, 1987).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데이터와 통계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 둔다.

루고 있다.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모니터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가 갖는 차별점이다. 글로벌 지표는 확정되었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SDGs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가 한국의 SDGs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2장

SDGs와 데이터

1.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 SDGs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UN 공식문서에 등장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4] 용어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SDGs이다. SDGs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초점을 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지속성 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목표와 세부목표 또한 각각 8개에서 17개로, 21개에서 169개로 확장되었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7개 목표

SDGs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목표1)하고, 기아를 해소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목표2)를 목표로 한다. 건강한 삶 및 웰빙(목표3)과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목표4),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목표5)를 목표로 한다. 또한 물(목표6)과 에너지(목표7)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는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목표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목표9)에 의해 지지된다. 이를 통해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목표10)하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목표11)하고,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보장(목표12)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목표13)해야 하며, 해양생태계(목표14) 및 육상생태계(목표15)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목표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목표17)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UN, 2015).

이행 거버넌스

글로벌 차원의 SDGs 이행은 국가 및 지역(region) 차원의 이행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는 각 맥락에 부합하는 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SDGs 이행 거버넌스는 국가별로 다양하나, 총리실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SDSN(2018)에 따르면, G20(Group of 20) 국가 중 SDGs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은 14개국이다. 주관부처로는 8개국이 총리실, 5개국이 경제개발부, 4개국이 외교부, 3개국이 환경부이나,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여럿 된다. 한편, SDGs 거버넌스 내에서 통계청은 지표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2018년 3월,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로 K-SDGs 구축을 선포하고, 약 9개월 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214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SDGs를 통합적으로 이행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K-SDGs에는 현재 23개 관계부처와 4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통계청은 간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통계청은 글로벌 수준과 국가 수준의 지표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한다. 글로벌 지표 개발 및 개선 과정을

4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 G.H.)에 의해 주도되어,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하고 있다(UN, 1987).

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서 합의된 지표의 표준화된 작성 방법이 국내 통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적 맥락이 글로벌 지표 작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SDGs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글로벌 지표 개발 및 개선 과정

SDGs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reasonable) 지표 선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는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과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2015년 3월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IAEG-SDGs)[5]을 발족하였다. IAEG-SDGs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지표 선정 과정에 각국 통계청을 비롯해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영역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봄, 가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UNSC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지표 선정 작업은 SDGs 채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제안한 SDGs 초안을 바탕으로 UN 통계처(UN Statistics Division, UNSD)가 국제기구와 각국의 의견을 취합, 검토하여 300여 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후 IAEG-SDGs는 대면회의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41개 지표(중복 지표[6] 제외 230개)를 선정하여 2016년 3월 제47차 UNSC에 제출하였다. UNSC는 기술적 개선을 전제로 지표안에 동의하였으며, IAEG-SDGs는 이후 1년 동안 추가 검토를 통해 244개 지표(중복 지표 제외 232개)로 이루어진 개정안을 제48차 UNSC(2017년 3월)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s and Social Council, UNECOSOC)를 거쳐 7월 UN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IAEG-SDGs는 데이터 가용성 향상 및 방법론 발전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진행되는 지표 종합검토과정(Comprehensive Review, 2020/2025)에서는 지표 방법론 개발이 지연된 경우, 현재 지표가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모니터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표의 수정, 삭제,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169개의 세부목표는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126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43개)으로 구분된다.[7] 이에 따라 244개 지표 또한 194개의 목표 지표(goal indicators)와 50개의 이행수단 지표(means of implementation indicators)로 구분할 수 있다.

IAEG-SDGs는 효율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각 지표별로 담당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및 지표 수

(단위: 개)

목표	세부목표		지표	
		이행수단 성격		이행수단 성격
1. 빈곤 퇴치	7	2	14	4
2. 기아 종식	8	3	13	4
3. 건강과 웰빙 증진	13	4	27	6
4. 양질의 교육 보장	10	3	11	3
5. 성평등 달성	9	3	14	4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8	2	11	2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5	2	6	2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2	2	17	2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8	3	12	3
10. 불평등 감소	10	3	11	3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0	3	15	4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	11	3	13	3
13. 기후변화 대응	5	2	8	2
14. 해양생태계 보존	10	3	10	3
15. 육상생태계 보호	12	3	14	3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12	2	23	2
17. 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19	0	25	0
계	**169**	**43**	**244**	**50**

5 이 그룹의 회원국은 UN의 지역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2년 동안 각 지역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2018년 기준 28개 국가 통계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기구, 지역위원회 대표가 참관인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은 중국, 키르기스스탄, 피지, 사모아, 필리핀, 인도이다.

6 IAEG-SDGs는 목표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고 국가보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표에 한해 중복을 허용하였다. 이를 다목적 지표(multipurpose indic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7 이행수단 성격의 세부목표 및 지표는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에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예) 세부목표 1.a, 지표 1.a.1

국제기구(custodian agencies)를 지정하여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표 산출 방법론 개발 여부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3개의 티어(Tier)로 지표를 분류하였다. 티어 1은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 티어 2는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지표, 티어 3은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인 지표를 의미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232개 지표 중 티어 1에는 93개, 티어 2에는 72개, 티어 3에는 62개가 속하며, 5개 지표는 하나의 지표가 2개 이상의 티어[8]로 분류된다.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지표 산출이 가능한 경우(티어 1)는 전체 지표의 40%정도임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지표의 티어 분류

(단위: 개, %) (2018년 10월 기준)

구분	내용	지표 수(비율)
티어 1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	93(40.1)
티어 2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지표	72(31.0)
티어 3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인 지표	62(26.7)
다중티어	지표의 하위 구성 요소 간에 티어 유형이 다른 경우	5(2.2)
계		232(100)

모니터링 및 평가

목표 및 세부목표는 지표에 기반하여 모니터링되며, 이 결과는 글로벌 수준의 SDGs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기본 정보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UN 사무총장 주도하에 작성된 SDG 연간 이행보고서(SDG Progress Report)와 4년 주기의 과학과 정책 연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가 발간된다. 이와 함께 각국은 자발적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들 모두 구체적인 통계 수치에 근거한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정도를 담고 있어 정책입안자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동력을 제공한다.

3. SDGs에서 데이터의 역할

SDGs 이행 과정에서는 전례 없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SDGs는 목표의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별도의 17번째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 등과 함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disaggregated)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이 세부목표는 향후 15년간 통계 개발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우선 데이터 세분화는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평균치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평균은 대표적인 통계치이기는 하나 분산이 크면 사회에 대한 왜곡도 커질 수 있다. 데이터 세분화는 평균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소득, 성, 연령, 이주상태, 장애,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평균 뒤에 가려져 있던 저소득층, 여성[9], 어린이, 노인, 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가시화하여 이들을 정책적 대상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Leaving No One Behind)' 하고자 하는 2030 의제의 포용성 원칙을 실천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관한 것이다.

8 예를 들어 지표 4.1.1은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에서 최소숙달 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인데, (a)는 티어 3, (b)와 (c)는 티어 2로 분류된다.

9 여전히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섹스(sex)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른 여자(female)와 남자(male)를, 젠더(gender)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여성(woman)과 남성(man)을 지칭한다(Mikkola, 2017). SDGs 지표 번역 과정에서 영어 원문에 근거하여 여자와 여성으로 번역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 맥락에 따라서 두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경제 중심의 GDP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itiative)',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GDP를 넘어서(GDP and Beyond)' 등이 그 예이다. SDGs는 이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세분화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은 국가통계 개발과정에서 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10]

이외에도 SDGs는 지표 프레임워크가 독립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각국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인 IAEG-SDGs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 그룹에 의해 마련된 안은 UN 통계위원회를 넘어 경제사회이사회 및 총회까지 거쳐 채택됨으로써 힘을 얻고 있다.

10 박영실 외(2017)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다.

3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

1. 글로벌 DB의 한국 데이터 수록 현황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는 전 세계 국가의 2000-2018년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2018년 9월 10일 기준 232개 지표 중 144개 지표에 대해 356개의 데이터와 1072만 3285개의 관찰값이 있다.[11] 지표 수보다 데이터 수가 많은 이유는 해당 지표 산출 시 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세 미만 사망률(지표 3.2.1)에는 5세 미만 사망률뿐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사망률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5세 미만 사망자 수와 영아 사망자 수도 수록되어 있다.

데이터는 작성 방법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국제기구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인 표준, 정의 등에 따라 개별 국가 데이터를 보정(Adjusted), 추정(Estimated) 혹은 모델링(Modeled)한다. 이에 따라 구분된 SDGs 지표의 데이터 속성(nature)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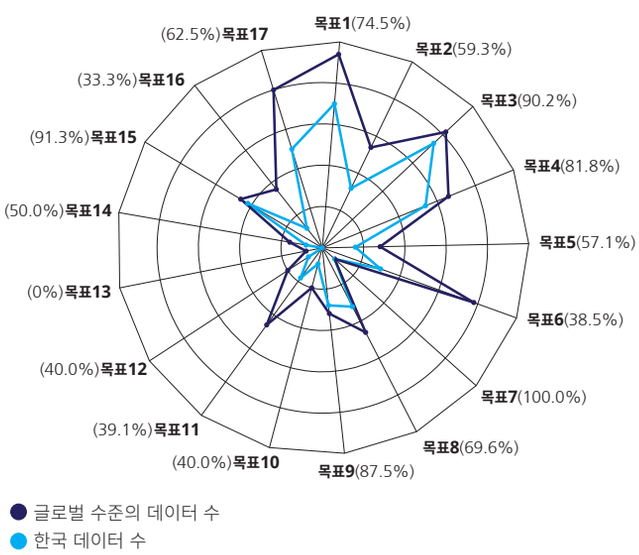
데이터 속성 유형

유형	정의
C (Country Data)	개별 국가에서 생산 · 공표된 데이터
CA (Country Adjusted)	개별 국가에서 생산 · 공표된 데이터이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보정한 데이터
E (Estimated)	특정 연도의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거나 혹은 자료출처가 다양한 경우, 자료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국제기구에서 추정한 값을 사용
M (Modeled)	이 수치는 추정해야 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얻은 값
G (Global Monitoring)	지표를 소관하는 국제기구에서 국가자료를 기반으로 글로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

한국은 109개 지표에 대해 245개 데이터와 5558개 관찰값을 보유하고 있다. 245개 데이터의 속성을 보면 C는 91개, CA는 12개, E는 45개, M은 6개, G는 12개이다. 나머지 중 44개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35개는 미분류 상태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45개 데이터는 다른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과 G7(Group of 7)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 수를 비교해 보았다(다음 쪽 그래프 참조).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데이터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은 데이터 수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한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수는 129개로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G7 국가는 데이터 수가 200개 전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수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해서 과연 데이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이터 수로 해당 국가의 통계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듯, 데이터의 많고 적음은 17개 목표별로도 매우 다르다.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수 대비 한국의 데이터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목표 3, 목표 4, 목표 7, 목표 9, 목표 15에서 80% 이상의 데이터 축적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목표 6, 목표 10, 목표 11, 목표 12, 목표 13, 목표 14, 목표 16의 데이터 축적률은 50% 이하이다.

글로벌 DB 내 목표별 데이터 수 및 축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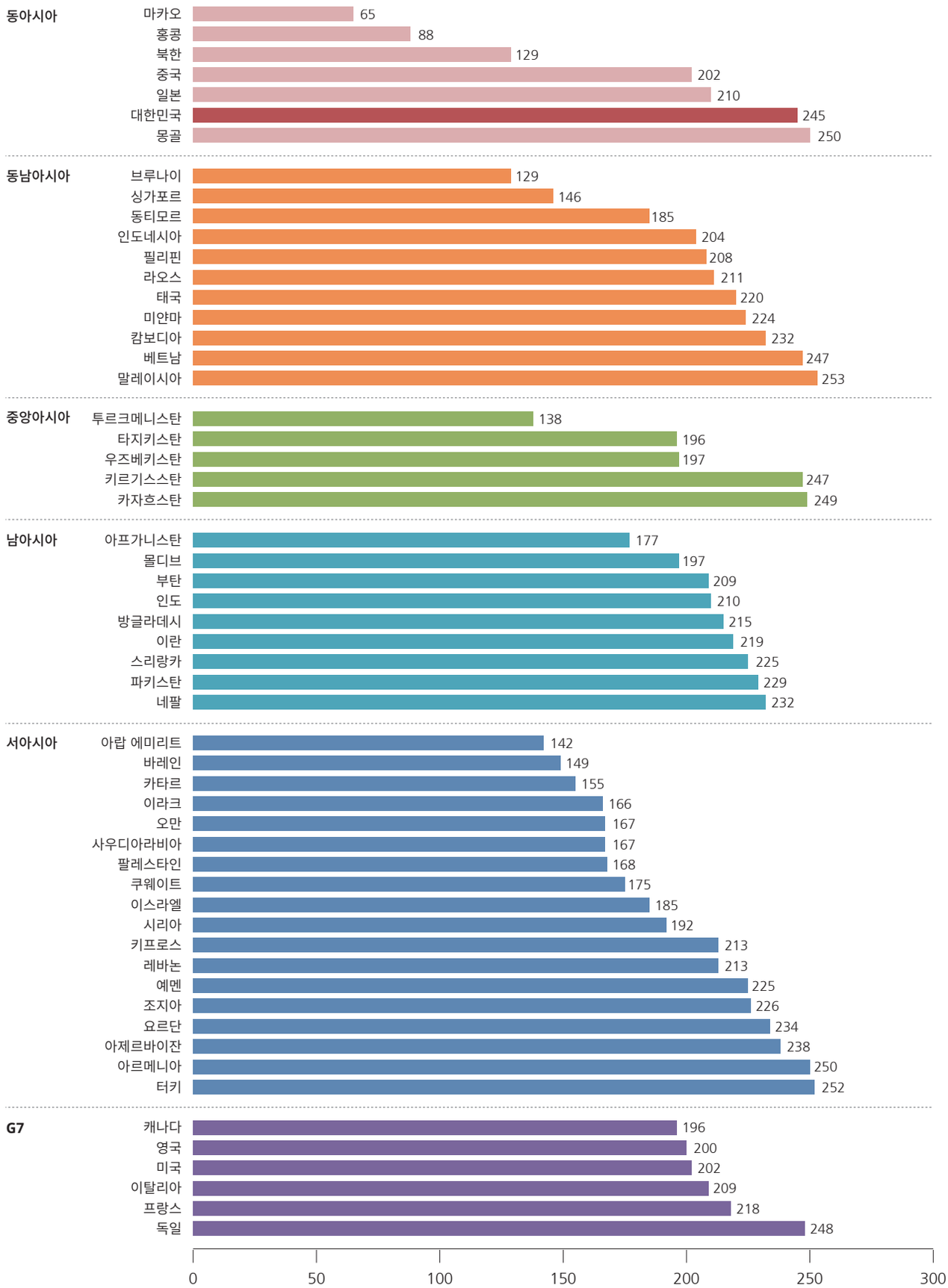


주: 축적률은 (한국 데이터 수 /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수) X 100 으로 계산하였음

11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므로 가용한 데이터 수와 관찰값 수, 보유연도는 해당 사이트 접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아시아 국가 및 G7 국가의 글로벌 DB 내 데이터 수

(단위: 개)



주 1: 국가 기준은 UNSD의 'Standard country or Area Codes for statistical use'를 따름
2: G7 국가 중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범주에서 제시하였음

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1. 분석 지표 선정

본 보고서는 글로벌 DB에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분석 지표는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중 2000년 이후 최소 2개 시점의 데이터가 있어서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단, 법, 제도 및 정책 실행 유무와 정도 등을 묻는 질적인 지표(예: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010년 이후의 최근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선정된 글로벌 지표는 30개이다.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더라도 국내에 유사 통계가 있을 경우 혹은 DB에 데이터가 없으나 국내에 해당 개념을 측정하는 유사 통계가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하였다. 유사 통계는 24개 지표에서 활용되었다. 아래의 표는 구체적으로 목표별 이행분석에 활용된 지표 수를 정리한 것이다.

국제비교는 G7 국가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알파벳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이 속해 있는 OECD 국가 및 G20 국가와의 비교도 고려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이 되는 이 기구의 회원국 데이터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분석에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G7 국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G7 국가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지표 수 현황

(단위: 개)

목표	총 지표 수		분석 지표 수		
		데이터 가용		글로벌 데이터	국내 유사
1. 빈곤 퇴치	14	6	3	1	2
2. 기아 종식	13	6	5	1	4
3. 건강과 웰빙 증진	27	22	6	6	0
4. 양질의 교육 보장	11	7	4	4	3
5. 성평등 달성	14	4	3	3	0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11	7	3	1	2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6	4	2	2	1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7	9	3	3	0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12	9	4	4	0
10. 불평등 감소	11	3	1	1	1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5	5	3	1	2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	13	2	3	0	3
13. 기후변화 대응	8	3	1	0	1
14. 해양생태계 보존	10	2	2	0	2
15. 육상생태계 보호	14	6	2	1	1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23	5	3	1	2
17. 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25	9	1	1	0
계	**244**	**109**	**49**	**30**	**24**

2. 분석 결과 해석 시 유의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해당 목표별로 가용한 통계를 중심으로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가 해당 목표 전체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목표 분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지표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 DB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보정, 추정, 모델링된 경우도 있다. 이 데이터의 경우 국내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다. 셋째, 하나의 지표에 데이터 원천이 여럿인 경우 국가통계 중에서도 시계열이 길고, 세분화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국제비교의 경우 국가마다 데이터 가용시점 및 조사 종류의 차이에 따라 비교연도 및 출처가 다를 수 있다. 다섯째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세부적 내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빈곤을 없애는 일은 국가 발전 의제 못지않게 글로벌 발전 의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기준의 절대 빈곤율은 2015년 10.0%로 2002년 25.6%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1명은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이에 SDGs는 첫 번째 목표로 빈곤퇴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빈곤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재난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취약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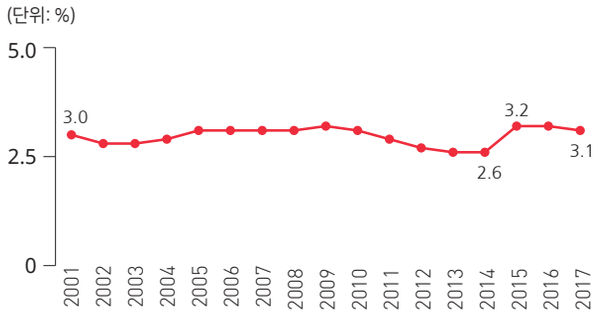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지역(도시/농촌)별]
1.2	**2030년까지 국가 빈곤 정의에 따른 상대적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별) 유 **상대적 빈곤율**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사회적 보호 체제 및 조치 이행과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3.1 사회적 보호 체제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4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재산의 소유와 통제,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 인구 비율(성,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경감**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1.5.3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a	**개도국 빈곤 종식을 위한 개발협력 증진**
	1.a.1 정부가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한 국내 재원 비율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a.3 GDP 대비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비부채성 자금유입과 총 보조금의 합
1.b	**빈곤 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 촉진,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의 경상 및 투자 지출 비율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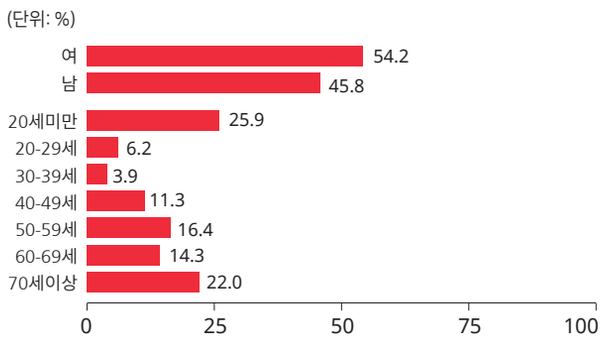
사회보장시스템은 생애 전반에서 빈곤과 취약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ILO, 2018).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그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은 2009년 이후 감소세로 2014년에 2.6%까지 떨어졌다가 이러한 개편의 영향으로 2015년에 3.2%로 반등하여 2017년까지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일반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합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주 : 수급률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하여 계산함

성 및 연령별 일반수급자 현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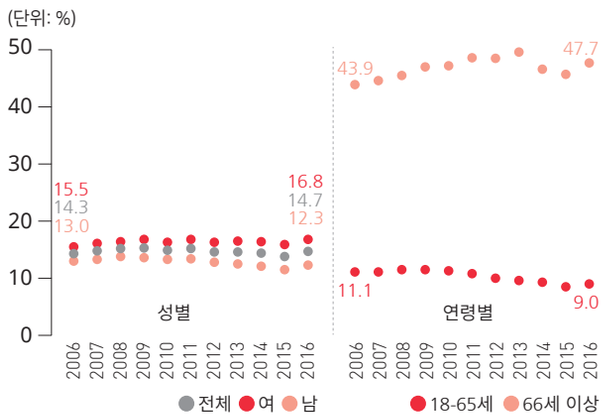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빈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에 대한 일정 비율을 빈곤 판단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 기준선 이하(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전체 인구와의 비율로 정의한다(사회보장위원회, 2018).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7%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할 때 0.4%p 상승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7.7%로, 18-65세 근로연령층(9.0%)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한편, 모든 연도에서 일관적으로 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남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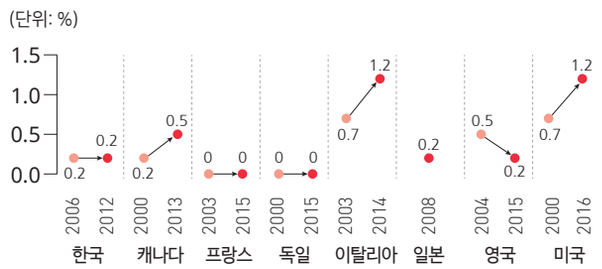
글로벌 수준에서도 빈곤을 추적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1년 국제물가를 기준으로 1일 1.9 달러로 빈곤선을 정의하고 있다(IAEG-SDGs, 2018a). 이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2012년 0.2%로 추정되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2015년)와 독일(2015년)은 0%, 캐나다(2013년)는 0.5%, 미국(2016년)과 이탈리아(2014년)는 1.2%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자료
주 1: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 수준을 비교가능하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3: 2016년부터 공식분배지표 자료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국제적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2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기아와 영양결핍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이 공동 발간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인구 중 10%가 넘는 8억 21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이고, 이러한 기아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SDGs에서는 기아 종식을 단순히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급 ·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식량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생산체계를 확보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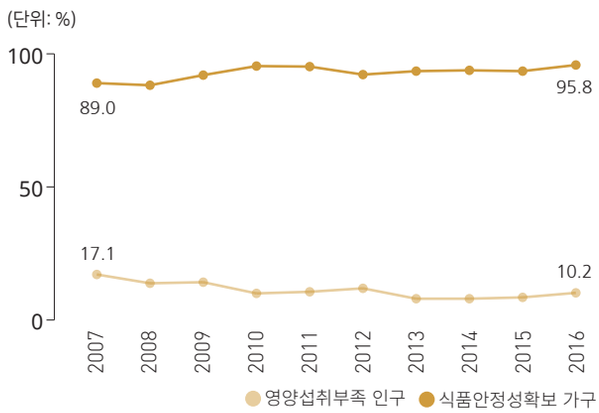
2.1	**기아 종식, 모든 사람에게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유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인구 비율 유 **식품안정성확보 가구 비율**
2.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청소년 · 임신 · 수유 여성 · 노년층의 영양 결핍 해소**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비율(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비율(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저체중, 과체중별)
2.3	**토지, 자원,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 보장을 통한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
	2.3.1 노동 단위당 생산규모(농업, 축산업, 임업규모에 따른 계층별) 유 **농업노동생산성**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토착지위별) 유 **농가소득**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확보**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면적 비율
2.5	**동식물 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및 이익 공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위험수준(위험, 비위험, 알려지지 않은)에 따른 지역 품종 비중
2.a	**개도국 농업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투자 확대**
	2.a.1 정부지출 대비 농업생산지수
	2.a.2 농업부분 공적투입액
2.b	**도하개발라운드(DDR)에 따른 농산물시장 무역 규제**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식량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위한 조치**
	2.c.1 식량가격이상지표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영양 및 식량 공급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근거로 계산한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은 2016년 10.2%로, 10년 전(2007년) 17.1%에 비해 6.9%p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영양섭취부족 비율은 14.6%로 남자의 5.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일 시점에서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가구의 비율은 2007년 89.0%에서 2016년 95.8%로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한 가구의 비율이 11.0%에서 4.2%로 줄었음을 의미한다.

영양섭취부족 인구 및 식품안정성확보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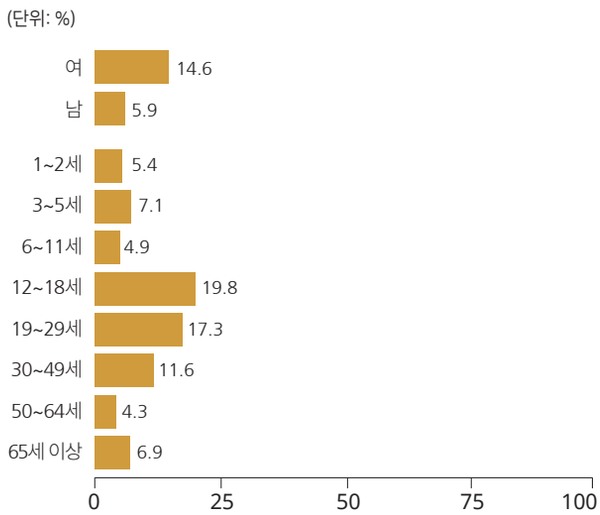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주 1: 영양섭취부족 인구는 보건복지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에너지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2: 식품안정성확보 가구는 최근 1년간 가구의 식생활 형편을 묻는 문항에 대해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가구를 의미함

성 및 연령별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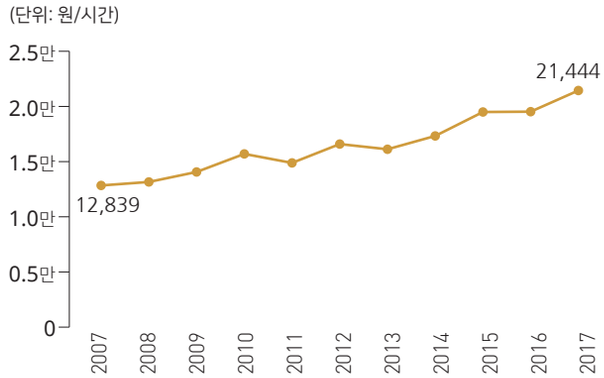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농업 노동생산성 및 농가 소득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시간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산업 간 혹은 농가 간 경제적 생산성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007년 1만 2839원에서 2017년 2만 1444원으로 늘어났다. 영농형태별로 살펴본 노동생산성은 축산업이 4만 193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논벼가 2만 8387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노동생산성은 경지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10ha이상 농가는 시간당 4만 1947원으로 0.5ha 미만 농가의 8116원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아서 경지규모가 넓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 한편 경지규모에 따른 농가의 연간소득을 비교해 보면, 면적이 5.0ha-7.0ha 미만인 농가는 6575만 원으로 0.5ha 미만인 농가소득의 3432만 원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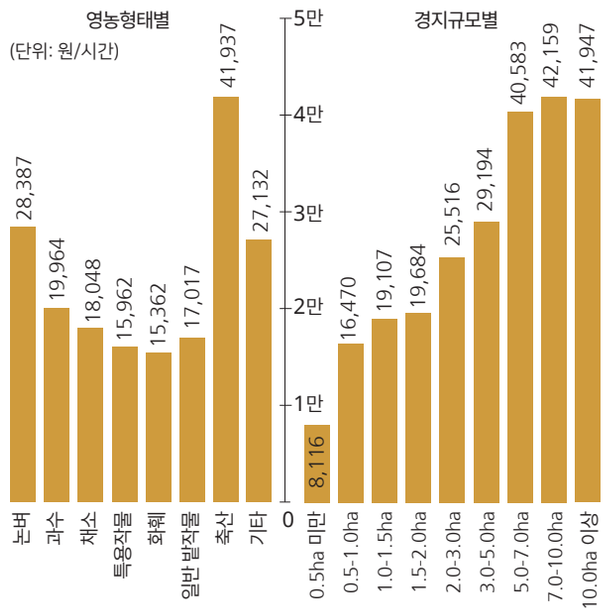
농업 노동생산성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주 : 농업 노동생산성 = 농업 부가가치 / 자영농업시간
농업 부가가치 = 농업총수입 – (중간재비 – 감가상각비)
자영농업시간 = 가족노동 + 품앗이 + 고용노동 + 일손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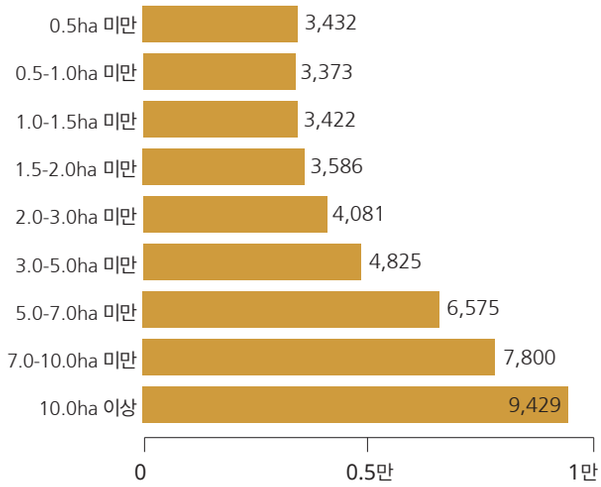
영농형태 및 경지규모별 노동생산성: 2017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경지규모별 연간 농가소득: 2017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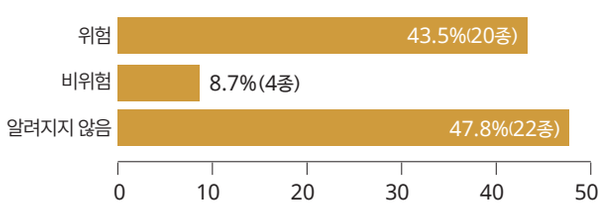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주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유전 자원의 다양성

FAO는 가축 사육두수 및 번식구조에 따라 멸종 위험도를 멸종, 위기,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DAD-IS)을 통해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현재 106종의 가축품종을 등재하였고, 이 중 46종이 SDGs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품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등록된 지역품종 중 20종(43.5%)이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멸종 위험 수준에 따른 지역품종의 수: 2018



출처 : FAO, Global Databank for Animal Generic Resources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 GOOD HEALTH AND WELL-BEING

과거에 비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UN, 2018). SDGs는 건강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식 하에 아동 사망 감소, 모성건강 향상, 감염성 질병 감소 등 개별 이슈를 목표로 제시했던 MDGs를 확장하여 비감염성 질병과 건강위험인자를 줄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	**산모 사망률 감소**
	3.1.1 모성 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3.1.2 의료전문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출산 비율
3.2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2.2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3	**감염성 질병 퇴치**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성, 연령, 고위험군별)
	3.3.2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000명당)
	3.3.4 B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3.5 소외열대질환(NTD)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
3.4	**비감염성 질병 조기 사망 감소, 정신건강 및 복리 증진**
	3.4.1 순환계통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3.4.2 자살 사망률
3.5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5.2 연간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3.6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3.7	**성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3.7.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 피임방법 사용 비율
	3.7.2 해당 연령(10–14세, 15–19세) 1000명당 여성 청소년 출산율
3.8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3.8.1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범위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
3.9	**유해물질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3.b	**개도국에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3.b.1 국가 백신접종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인구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총 지출액 및 순 지출액
	3.b.3 적당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3.c	**개도국 보건인력 훈련 및 보유 확대**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3.d	**개도국 보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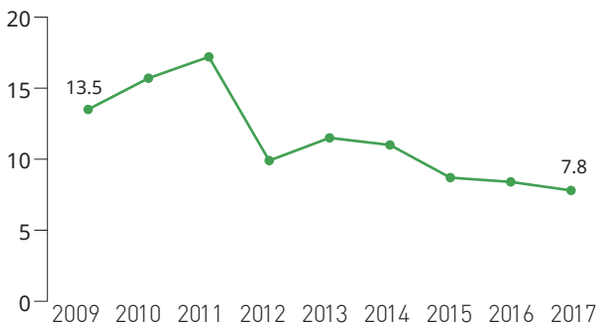
모성 및 5세 미만 사망

2017년 기준 국내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7.8명이다. 이는 2009년 13.5명과 비교해 보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다. 국제비교를 위해 추정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비교 대상 국가 중 한국보다 모성사망비가 높은 국가는 미국뿐이며, 미국은 나머지 국가와 달리 사망비가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5세 미만 사망률은 2017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3.3명으로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2.6명이었으며, 다음이 이탈리아(3.4명), 독일(3.7명), 프랑스(4.2명), 영국(4.3명), 캐나다(5.1명), 미국(6.6명)이었다. 성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모든 국가에서 남아 사망률이 여아 사망률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다.

모성사망비

(단위: 출생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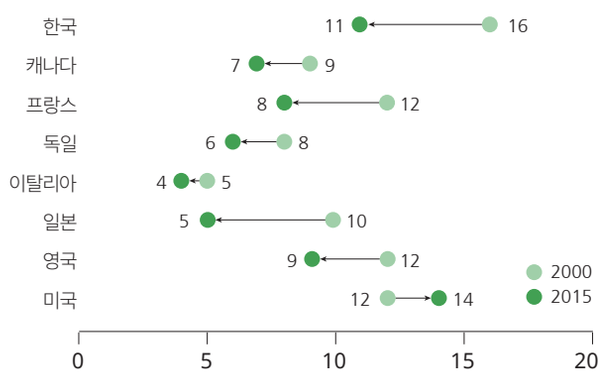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 모성사망비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직 · 간접적 산과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으로 해당기간 내 산모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로 나누어 계산함

모성사망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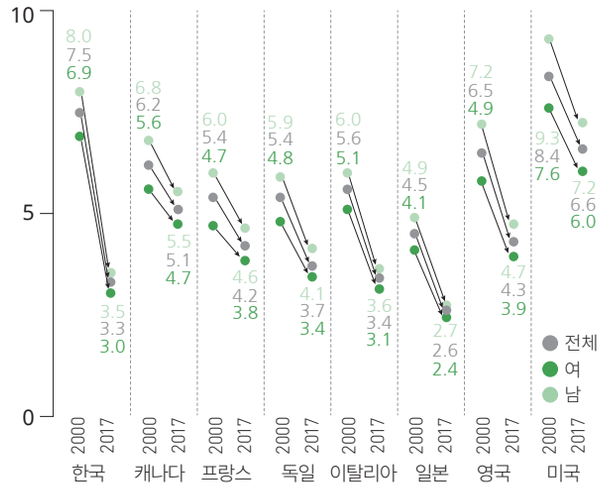
(단위: 출생아 10만 명당 명)



출처: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PD,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5

5세 미만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출생아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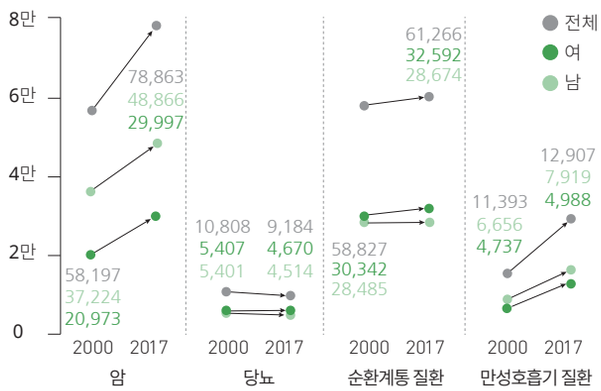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비감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

암, 당뇨, 순환계통 및 만성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당뇨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00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순환계통 질환에서는 여자의 사망자 수가 많은 반면에 암과 만성호흡기 질환에서는 남자의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추정한 네 가지 유형의 질환 전체에 의한 사망확률은 2000년 16.5%에서 2016년 7.8%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2016년) 일본은 8.4%, 이탈리아는 9.5%, 캐나다는 9.8%이었다. 한편, 비교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다.

암, 당뇨, 순환계통,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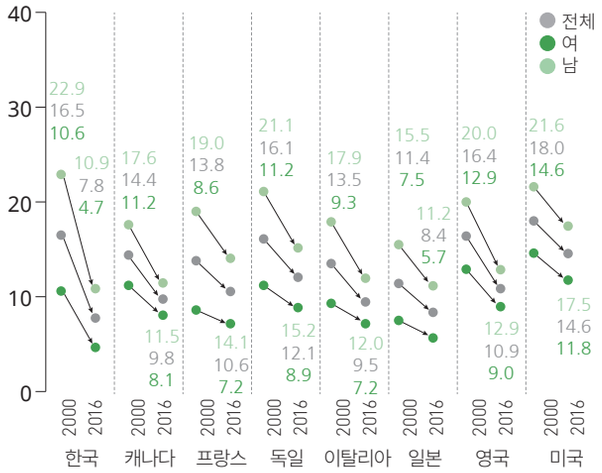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 만성호흡기 질환의 경우 SDGs 지표(3.4.1) 정의에 따라 질병 · 사인분류코드 J30-J98에 해당하는 수치를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집계함

암, 당뇨, 순환계통, 만성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확률

(단위: %)



출처: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s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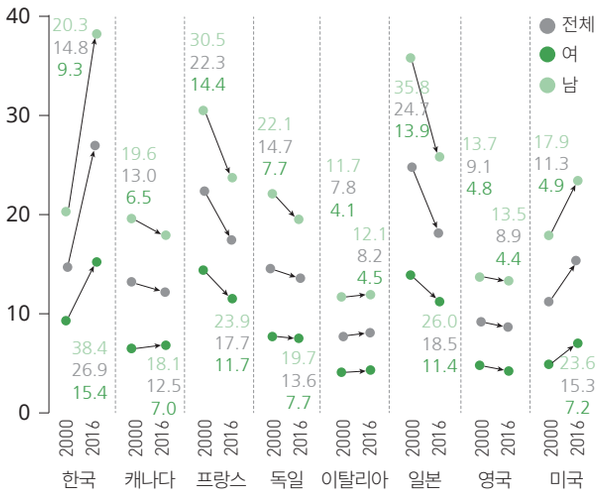
주 : 30-70세 사이에 암, 당뇨, 순환계통,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로 생명표 방법(Life table methods)을 사용하여 계산함

정신건강 및 유해 환경

국내에서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살과 운수사고이다(통계청, 2018a). WHO에서 각 국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4.8명에서 2016년 26.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2016년 8.2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한편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높다.

자살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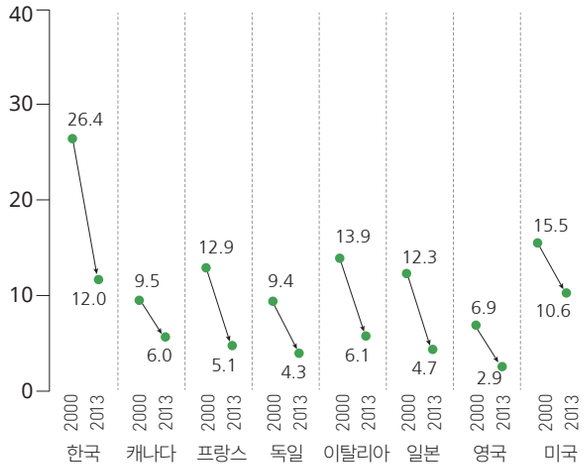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s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한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같은 시점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2.9명)의 4배에 해당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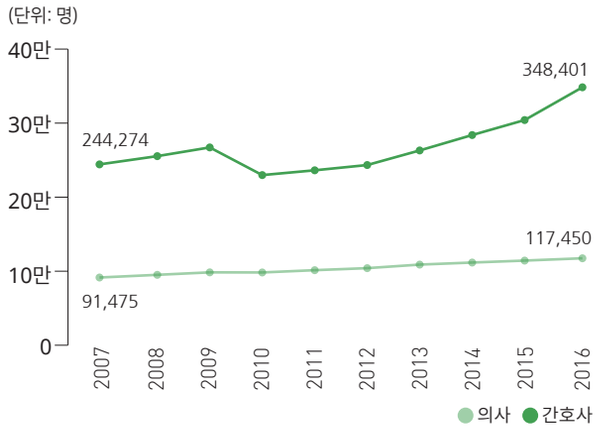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5

의료인력

2016년 한국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는 11만 7450명, 간호사는 34만 8401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의사 및 간호사 수가 각각 28.4%, 42.6%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의료인력 밀도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6년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3명인데 반해 독일은 4.2명, 이탈리아는 4.0명, 프랑스는 3.2명이었다. 간호사 수는 한국이 1000명당 6.9명이었는데 이는 독일(13.8명)의 절반 정도이다.

의사 및 간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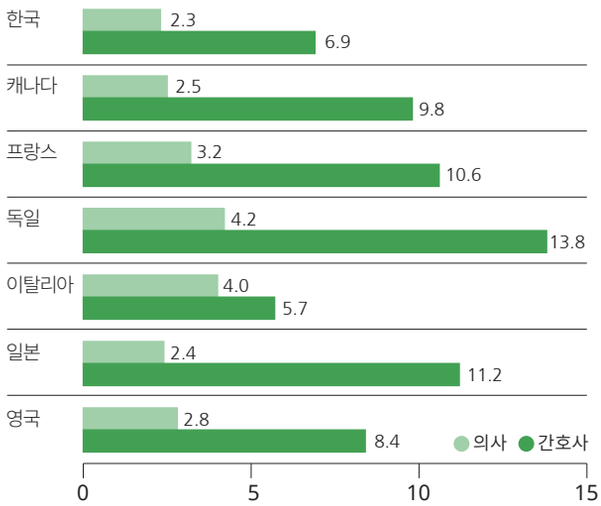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WHO,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Database

의사 및 간호사 수 국제비교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출처: WHO,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Database

주 : 일본은 2014년, 캐나다 · 프랑스 · 독일은 2015년, 한국 · 영국 · 이탈리아는 2016년 자료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교육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의 성취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동시에 SDGs의 다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따라서 SDGs에서는 초등교육 달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MDGs와 달리 영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육뿐 아니라 직업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4.1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유 기초학력수준 이상 학생 비율**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양질의 기술, 직업 및 고등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유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율**
4.4	**취업,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을 갖춘 인력 확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기술유형별)
4.5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해 평등한 접근 보장**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여부별 등)
4.6	**청소년 및 성인 문해력, 산술 능력 향상**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유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인구 비율**
4.7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4.a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시설, (g) (WASH 기준) 기초손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4.b	**개도국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규모(연구분야, 유형별)
4.c	**개도국에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 확대**
	4.c.1 (a) 유아, (b) 초등, (c) 중학교 및 (d)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임용 전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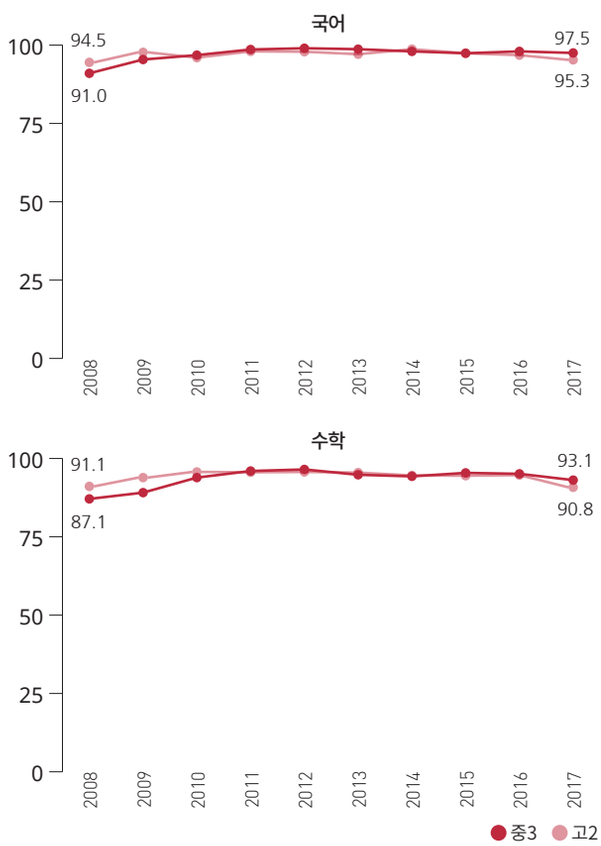
유 국내 유사 지표

영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이며,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90.0%를 상회하고 있어 보편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조지민, 2018). 그러나 한 국가의 교육제도 평가에서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교육수준 측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초학력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 97.5%, 수학 93.1%이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각각 95.3%, 90.8%이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학습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와 그 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읽기와 수학 두 영역에서 최소숙달수준을 달성한 비율이 캐나다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기초학력수준 이상 학생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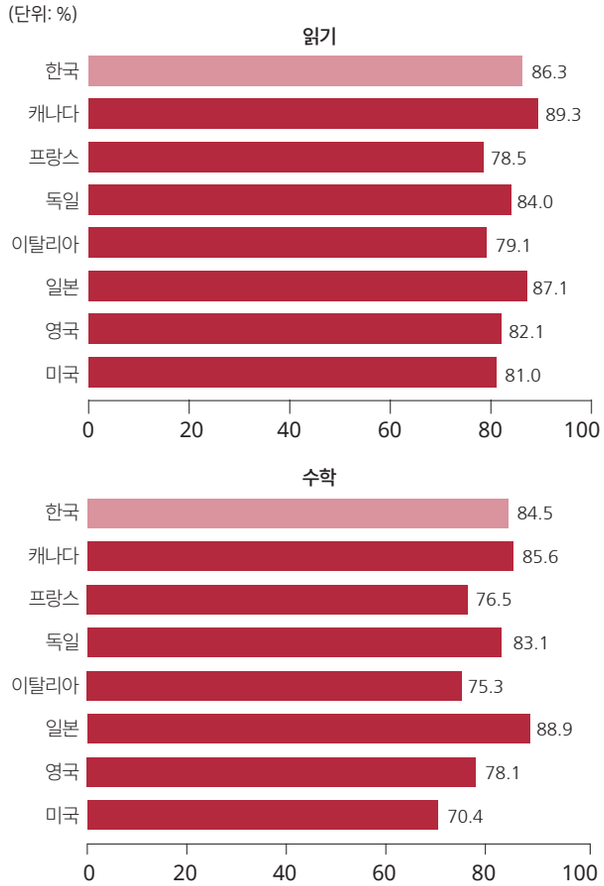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평가해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3단계로 발표함

최소숙달수준 달성 학생 비율 국제비교: 2015

(단위: %)



출처: OECD, P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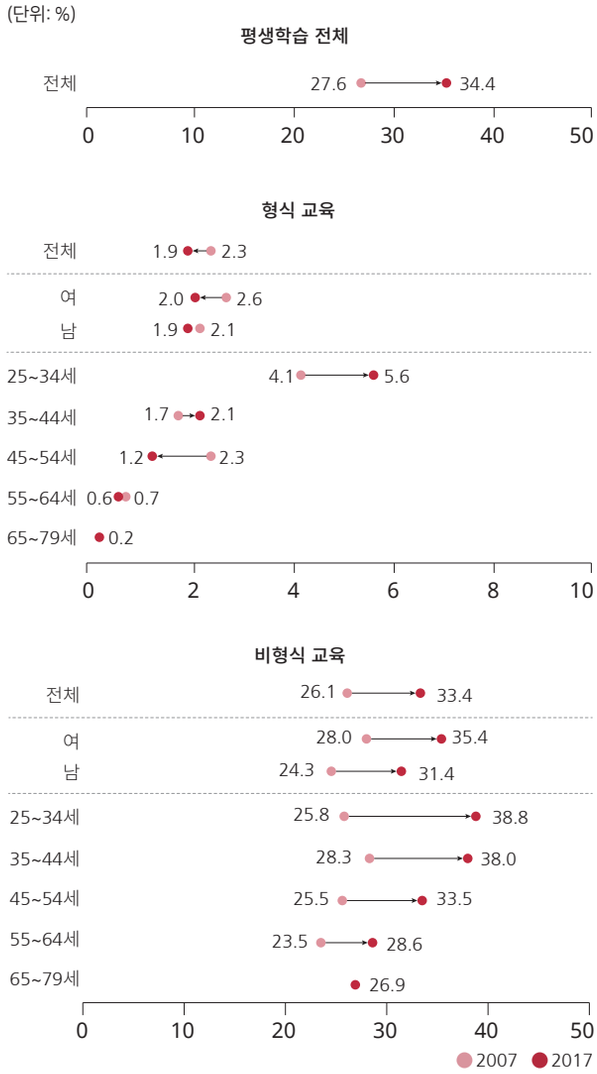
주 : 중등전반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학영역 이탈리아와 일본은 2012년 자료임

성인교육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7.6%에서 2017년 34.4%로 증가하였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형식교육은 2.3%에서 1.9%로 감소한 반면, 비형식교육은 26.1%에서 33.4%로 증가하였다. 특히 후자는 성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모든 집단에서 참여율이 늘어났다. 한편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 의하면, 형식 및 비형식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율은 49.7%인데 이는 미국(59.1%)과 캐나다(57.7%)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남자와 여자의 참여율이 비슷하거나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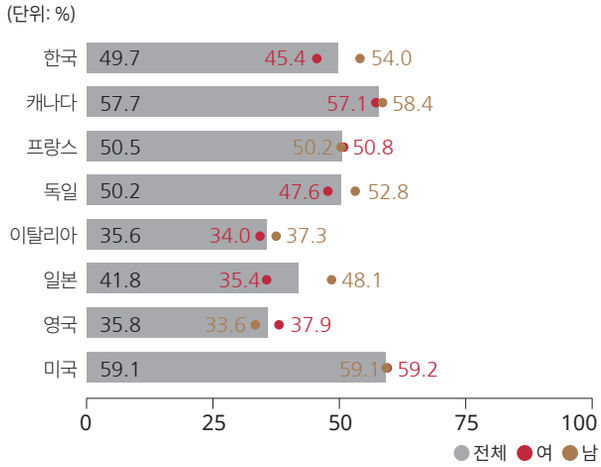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2016년까지는 조사 대상이 만25-64세였으나, 2017년부터 만25-79세로 변경되었음

2: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형식 및 비형식 교육과 훈련에 대한 참여율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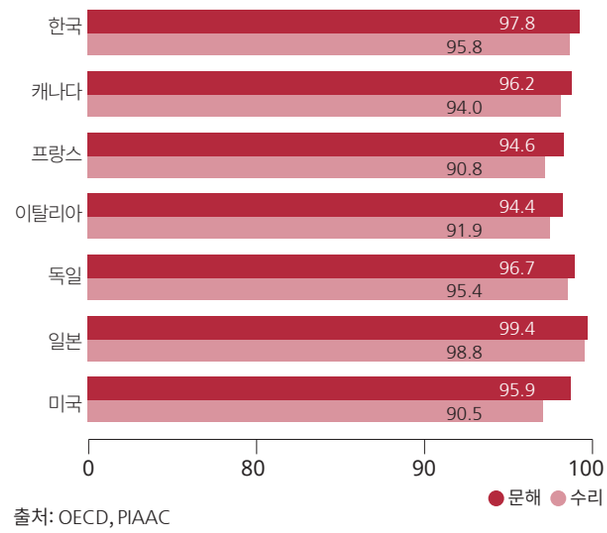
출처: OECD, 2012, PIAAC(한국 · 캐나다 · 일본 · 미국); Eurostat, 2011, Adult Education Survey(프랑스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

문해력

SDGs에서 문해력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성된 인쇄 자료나 기타 쓰여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식, 이해, 해석, 창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조순옥, 2018). PIAAC의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서 기능적 문해 및 수리 능숙도가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인구의 비율은 문해 부문 97.8%, 수리 부문 95.8%로 일본(각각 99.4%, 98.8%) 다음으로 높았다. 그런데 국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높아졌으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문해력을 갖춘 비율이 낮아져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기능적 문해 및 수리 능숙도가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인구 비율 국제비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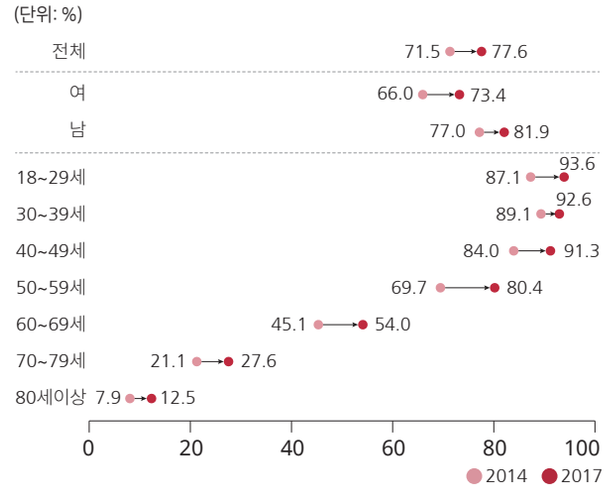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PIAAC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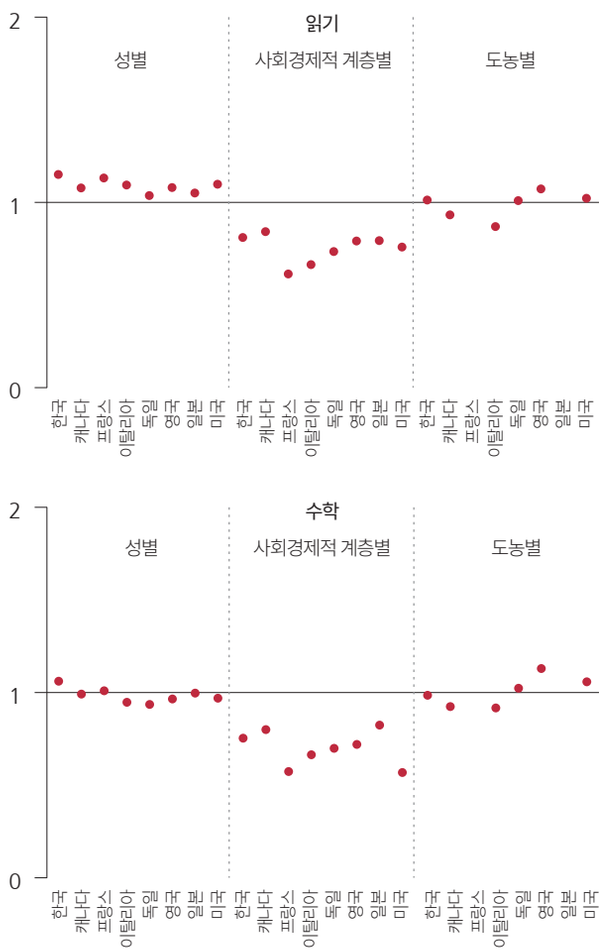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주 :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는 문해수준을 완전 비문해(수준1)에서부터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경우(수준4)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문해라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3까지를 지칭함. 여기에서는 수준4의 비율을 제시함

형평성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교육에서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parity index)를 개발하였다. 지수는 그 값이 1에서 멀어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읽기와 수학영역에서의 최소숙달수준에 대한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도농별 형평성지수를 보면 비교 대상 국가 모두 성별 및 도농별 형평성지수는 대부분 1에 근접해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형평성지수는 1에서 0의 방향으로 더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읽기와 수학영역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교육성취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수학영역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지수가 0.59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남녀 및 지역 간 격차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최소숙달수준 달성에 대한 형평성지수 국제비교: 2015



출처: OECD, PISA

주 1: 중등전반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학영역 이탈리아는 2012년 자료임. 프랑스와 일본의 도농간 비교 자료는 없음

2: 각 지수의 준거집단은 남성, 부유층, 도시임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성은 인간사회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Harari, 2018). SDGs가 성불평등의 해소를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이유이다.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인권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치 · 사회 · 경제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여성에 대한 악습 근절, 무보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치 · 경제 영역 내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서의 권한 증대 등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다.

5.1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차별 철폐**
	5.1.1 성평등 증진, 집행, 모니터링 근거 및 법체계 존재 여부
5.2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폭력 철폐**
	5.2.1 파트너가 있는(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폭력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발생장소별)
5.3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 유해한 관행 철폐**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성기절제(FGM/C)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5.4	**사회보호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가치 있게 인식**
	5.4.1 무보수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지역별)
5.5	**모든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5.5.1 (a) 국회 여성의석 비율, (b) 지방정부 여성의석 비율
	5.5.2 여성 관리자 비율
5.6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여성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혁**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 비율(토지 소유권 유형별)
	5.a.2 여성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가진 국가 비율
5.b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 강화**
	5.b.1 이동전화 소유자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견고한 정책 마련**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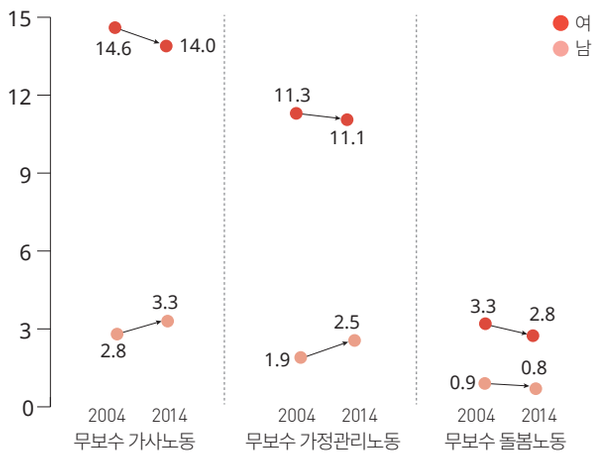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무보수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2014년 기준 여성은 하루 24시간 중 14.0%를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가사노동에 보냈으나 남성은 24시간 중 3.3%만을 여기에 할애하였다. 그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여성의 경우 0.6%p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0.5%p 증가하였으나 차이는 여전하다.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관리시간일뿐 돌봄시간은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해서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무보수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이 일관되게 더 많았다. 남녀 간 차이는 일본과 이탈리아가 12.0%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한국 11.0%p이고, 캐나다가 5.0%p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수 가사노동 시간 비율(10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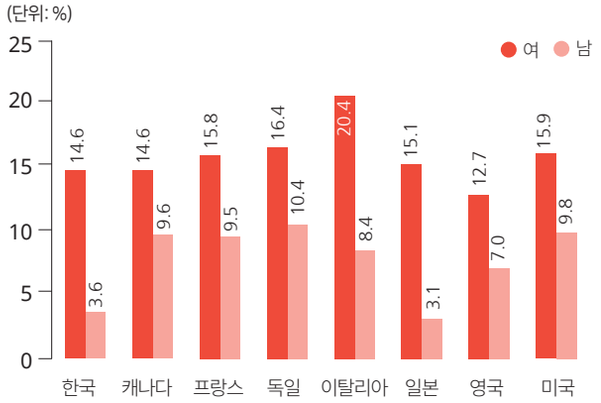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무보수 가사노동은 가정관리노동과 가족 및 가구원 돌봄노동을 합한 개념임

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에서는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이동시간이 제외되어 있으나, SDGs 지표(5.4.1) 정의에 따라 포함하여 재계산하였음

무보수 가사노동 시간 비율 국제비교(15세 이상)

(단위: %)



출처: UNSD, Time Use Survey

주 : 미국 · 캐나다 · 일본 2016년, 영국 2015년, 한국 · 이탈리아 2014년, 독일 2013년, 프랑스 201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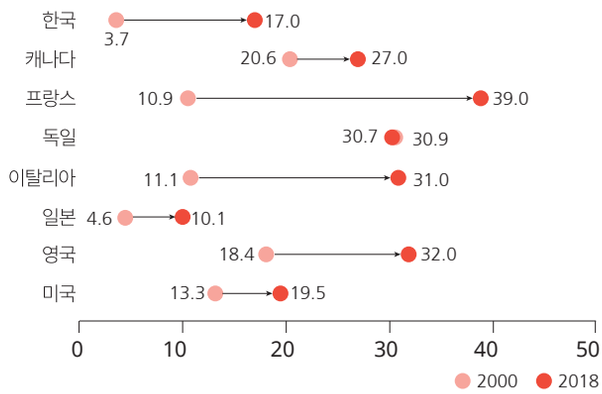
정치, 경제 영역 내 참여수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석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8년 현재 17.0%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여성이 전체 의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는 39%에 이른다.

관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7.1%)과 비교해 볼 때 점차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2.3%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이다. 일본만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이탈리아도 한국의 2배 이상인 27.7%를 보였다. 한편 미국은 전체 관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4%가 여성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국회의석 비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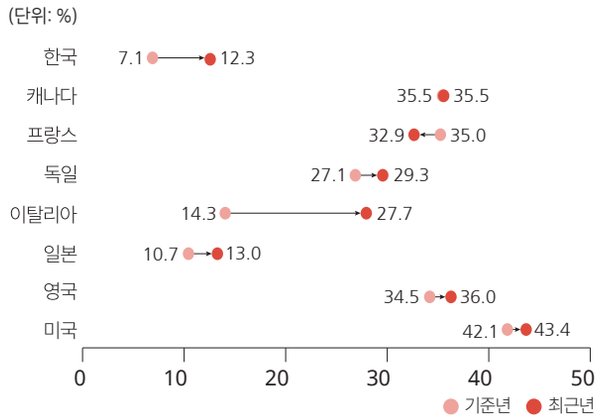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Database 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여성 관리자 비율 국제비교

(단위: %)



출처: ILO, Labour Force Survey

주 1: 캐나다 2000 v.s. 2014,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2000 v.s. 2016, 일본 2009 v.s. 2016, 미국 2003 v.s. 2013, 한국 2004 v.s. 2017

2: 한국 데이터는 시계열이 보정된 자료로 갱신하였음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6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O와 UN 아동기금(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의 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7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는 39%로 여전히 상당수의 인구가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빈곤과 기아 해소, 모두를 위한 건강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세부목표로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수질 개선,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진,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을 담고 있다.

6.1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유) 상수도 보급률
6.2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야외 배변 근절**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유) 하수도 보급률
6.3	**오염 저감, 유해물질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재사용을 통한 수질 개선**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 · 폐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 비율
6.4	**물 이용 효율성 증진**
	6.4.1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6.5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0–100)
	6.5.2 물 관련 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적 유역 비율
6.6	**수생태계 보호**
	6.6.1 수생태계 규모 변화
6.a	**물과 위생 관련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국제협력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6.b.1 물과 위생 관련 정책 참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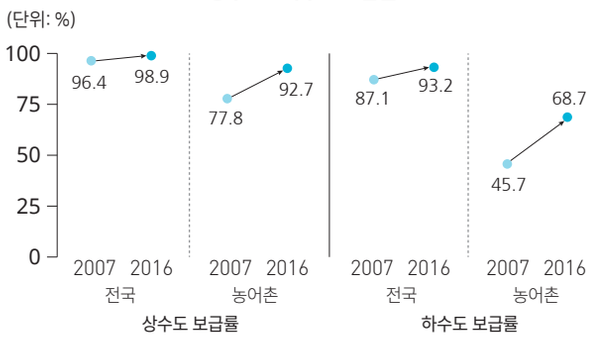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

WHO와 UNICEF가 실시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2017)에 따르면, 한국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98.0%,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98.5%로 높은 수준이다.[12] 이는 한국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밀접히 관련된다.

전국적으로 상 · 하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져 2016년 기준 각각 98.9%, 93.2%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격차가 드러난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6년 92.7%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같은 시기 하수도 보급률은 68.7%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상수도 · 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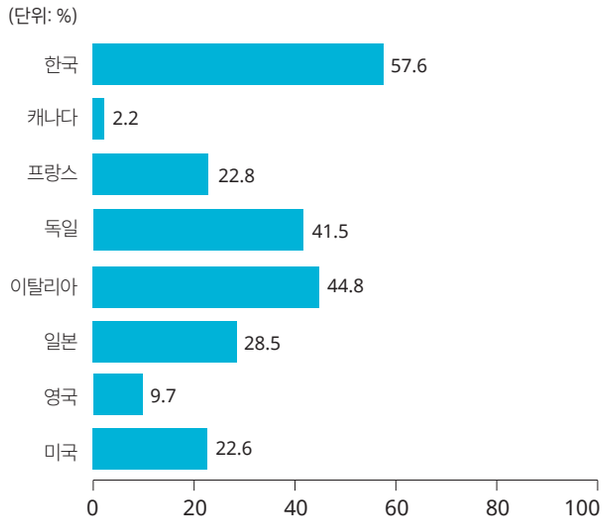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상수도 및 하수도 통계

물 이용 효율성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 중에서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그 값이 10%를 넘게 되면 물 스트레스 상태로 본다. 구체적으로 10-20%는 낮은 스트레스, 20-40%는 보통 스트레스, 40% 초과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로 간주한다(한국수자원공사, 2017). 효율성 확대를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이용가능한 수자원을 높여야 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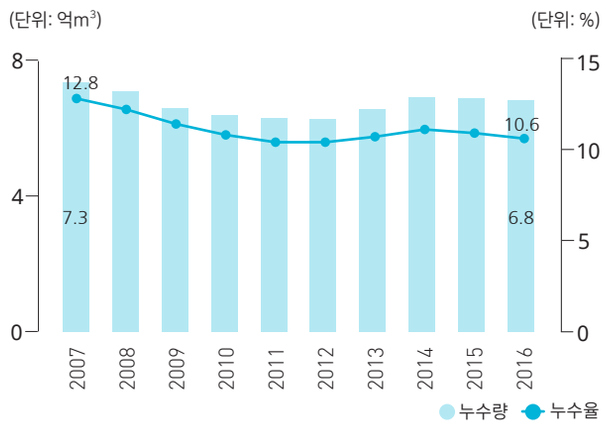
FAO에서 측정한 한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Level of Water Stress)은 2014년 기준 57.6%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이며, 이는 비교 대상 국가 모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캐나다, 영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각각 2.2%, 9.7%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이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다. 2016년 기준 상수도 누수량은 6.8억㎥이며, 이는 총급수량의 10.6%에 해당한다. 2007년에 비해서는 2.2%p 감소하였다.

물 스트레스 수준 국제비교: 2014



출처: FAO

상수도 누수율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주 : 누수율= (누수량/총급수량)X100

12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식수의 이용'은 접근 가능하고 필요할 때 이용가능하며 배설물 오염이 없는 개량된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의 이용'은 다른 가구의 위생시설을 공유하지 않고 배설물이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처리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이용을 의미한다(IAEG-SDGs, 2018b).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7은 모든 사람이 적정한 가격으로 신뢰할 만한 청정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분야는 최근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SDGs에서 독립적인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재생에너지 이용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7.1.1 전기 접근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7.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유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비중**
7.3	**에너지 효율 향상**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
7.a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투자 촉진**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개도국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7.b.1 지속가능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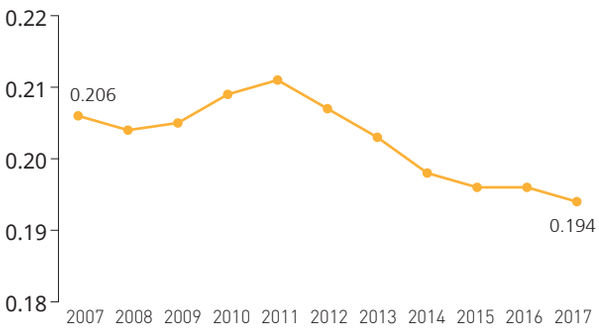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에너지 효율성

국가 에너지 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는 2017년 0.194toe/백만원으로 2009-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동안의 효율성 악화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설비 증설 및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원료용 에너지 및 전력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 집약도

(단위: toe/백만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에너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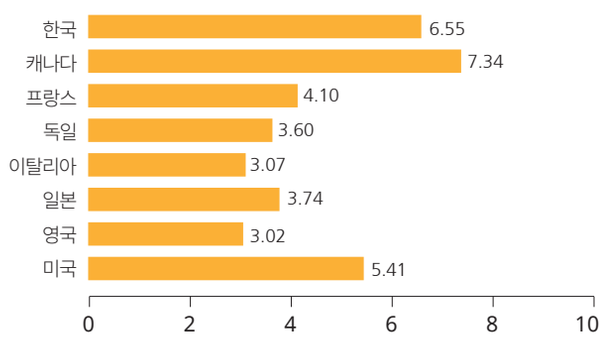
주 1: 1차에너지를 GDP로 나눈 값으로 국내에서는 에너지원단위로 표현됨. 1차에너지는 생산, 수출입 및 재고증감에 의해 국내에 공급된 에너지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 가정, 상업용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의 합으로 계산됨

2: GDP는 연쇄가격을 기준으로 함

3: toe(ton of oil equivalent)란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를 말함

에너지 집약도 국제비교: 2015

(단위: MJ/USD)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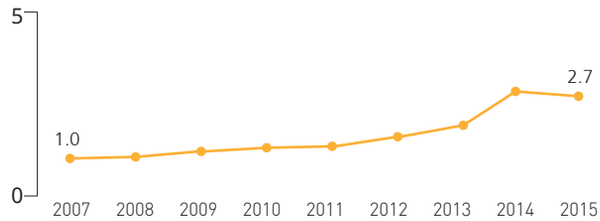
주 : GDP는 2011 PPP를 기준으로 함

재생에너지 이용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한국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꾸준히 늘어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22.0%, 이탈리아 16.5%, 독일 14.2%와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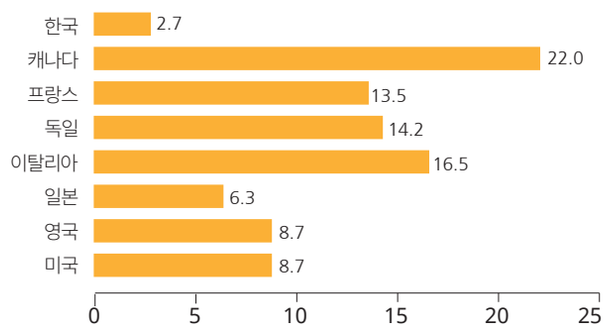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7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국제비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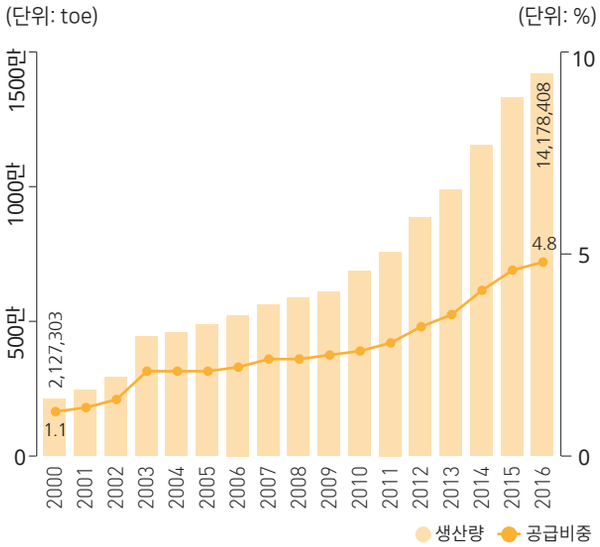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7

그러나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투자와 민간참여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차이점은 한국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연료전지, 석탄 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의 신에너지를 합한 신 ·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00년 212만 7303toe이었던 것이 2016년 1417만 8408toe으로 6.7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1차에너지에서 신 ·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6년 4.8%가 되었다. 신 · 재생에너지를 구성하는 에너지원별로 보면 2016년 기준 폐기물 61.7%, 바이오 19.5%, 태양광 7.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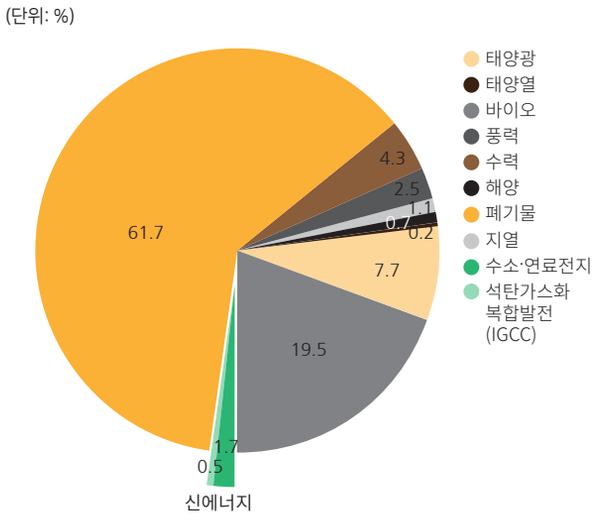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 1: 재생에너지는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태양광 ·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말하며,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을 말함

2: 공급비중은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임

신 ·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 2016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보급통계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8은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개선과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되, 그 과정에서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SDG8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지향적인 정책을 통한 산업 다변화와 자원 효율성을 개선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 아동노동 종식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등을 통해 생산적인 고용을 담보하고, 청년실업률 경감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장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8.1	**1인당 소득 증가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8.2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8.3	**개발 지향적 정책 진흥 및 중소기업 성장 장려**
	8.3.1 비농업 부문의 비공식 고용률
8.4	**자원 효율성 개선 및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
	8.4.1 물질발자국,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소비량
8.5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8.5.1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연령, 직업, 장애여부별)
	8.5.2 실업률(성, 연령, 장애여부별)
8.6	**청년 니트(NEET) 비율 감소**
	8.6.1 교육, 훈련 혹은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8.7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8.7.1 아동(5–17세) 노동 인구 수 및 비율(성, 연령별)
8.8	**노동권 보호 및 안정적 근로환경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빈도율(성, 이주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의 국가별 준수 수준
8.9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 개발, 이행**
	8.9.1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의 직접 기여 비율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 비율
8.10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 및 금융기관 역량 강화**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및 ATM 개수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15세 이상) 인구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원조 지원 확대**
	8.a.1 무역원조를 위한 약정 및 지불액
8.b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고용협약 이행**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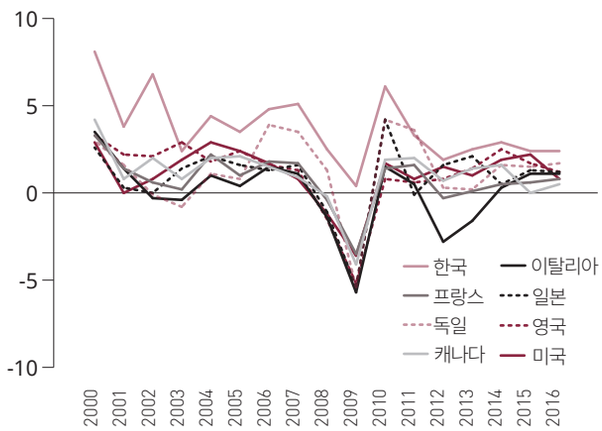
■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경제성장

경제의 발전단계가 높아지면서 성장률 둔화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관찰된다(윤윤규, 2017). 주요 7개국 중 캐나다, 프랑스, 미국의 2016년 1인당 GDP 연간 성장률은 1%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1%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은 2.4%이다. 고도 성장 후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한 번 성장률의 저점(0.4%)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최근 2%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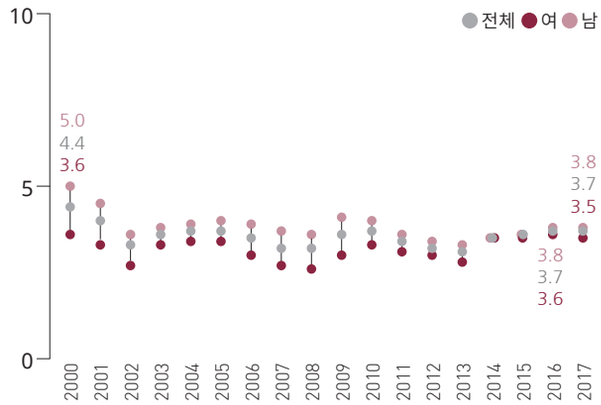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AMA)

양질의 일자리

한국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3%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일관되게 높다. 2014년에는 상대적으로 여자의 실업률이 증가하여 격차가 줄었으나 최근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00년 이후 20-29세 실업률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주요 7개국의 실업률은 일본이 3.1%로 가장 낮은 가운데 독일, 영국, 미국은 4%대,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0% 이상을 보였다. 한편 성별 실업률의 경우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다.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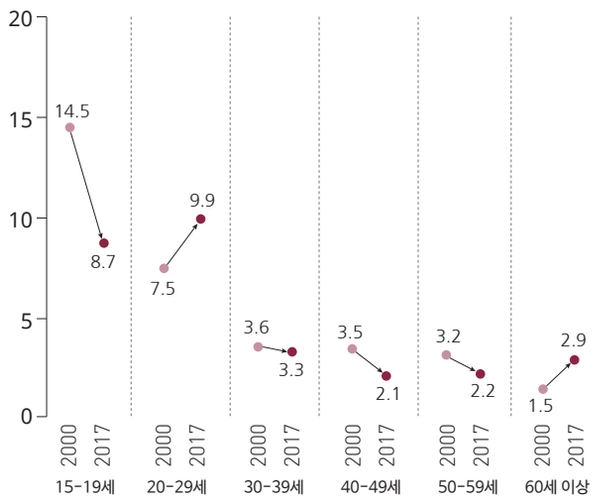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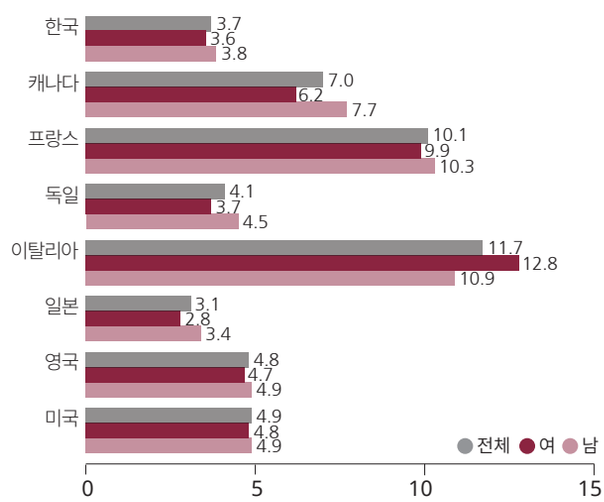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국제비교: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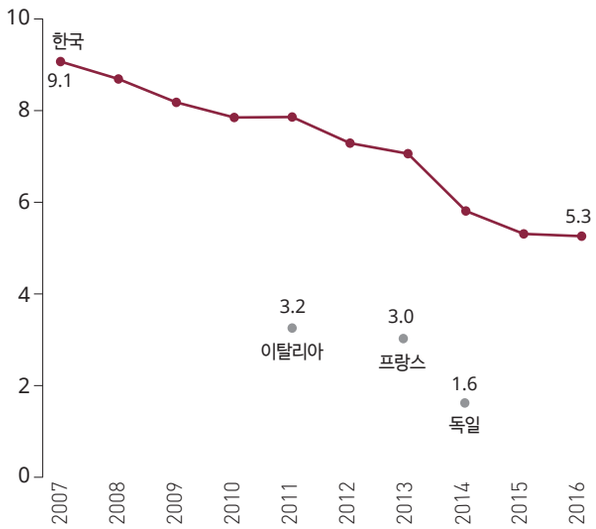
출처: ILOSTAT, Labor Force Survey

안정적 근로환경 증진

한국에서 치명적인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근로자 10만 명당 5.3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프랑스 3.0명(2013년), 이탈리아 3.2명(2011년), 독일 1.6명(2014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치명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 국제비교

(단위: 근로자 10만 명당 명)



출처: ILOSTAT, Occupational Accidents and Injuries Records
주 : 이탈리아는 2011년, 프랑스는 2013년, 독일은 2014년 자료임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며, 이것이 포용성, 회복력, 지속가능성과 결합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UN, 2017; 2018).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2005년 대비 2017년에 1.1%p 증가하고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가 2000년 대비 2015년 19%p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추세가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닌 바, 개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9.1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9.1.1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교통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9.2.1 GDP 대비 및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율
	9.2.2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
	9.3.1 전체 산업 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사회기반시설 개선 및 친환경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 확장**
	9.4.1 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연구개발(R&D) 인력 확대 및 산업분야의 기술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
9.a	**개도국 금융, 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촉진**
	9.a.1 인프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 지원(ODA+기타공적공급)
9.b	**개도국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 · 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최빈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 제공**
	9.c.1 무선네트워크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기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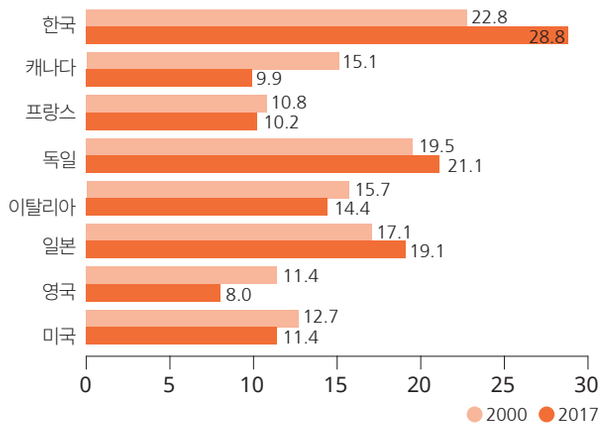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지속가능한 산업화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17년 28.8%로 2000년(22.8%)에 비해 6.0%p 증가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 중 2017년에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하는 국가는 독일(21.1%)뿐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19.1%), 이탈리아(1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2000년과 비교할 때 감소하는 추세여서 한국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증가와 달리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률은 2000년 대비 2017년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 대상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한국의 감소폭이 3.5%p로 가장 적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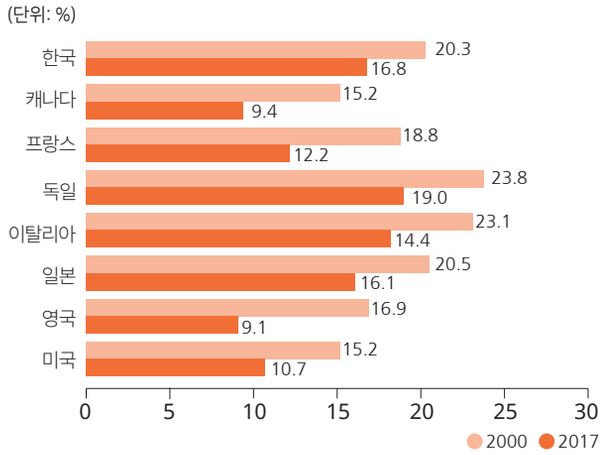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UNIDO, Manufacturing Value Added Database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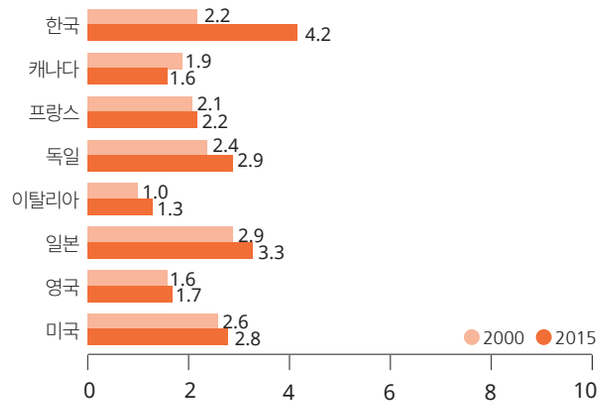
출처: ILOSTAT,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00년 2.2%에서 약 2배가 증가하여 2015년 4.2%가 되었으며 이러한 증가폭은 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13]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Full Time Equivalent, FTE) 수 또한 2015년 인구 1000명당 7.1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FTE 1인당 연구개발비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16만 5569달러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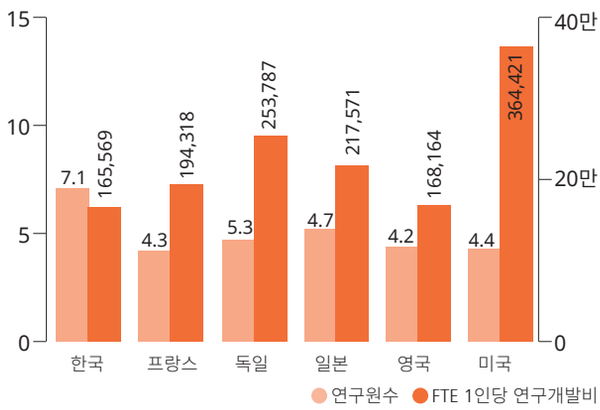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주 : 캐나다는 2014년 자료임

주요 국가의 연구원수 및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2015

(단위: 1000명당 명) (단위: USD)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3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스라엘(4.3%)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10은 국내와 국가 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성, 연령, 장애, 인종, 계급, 종교 및 기회에 근거한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로는 불평등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적 법률 · 정책 및 관례 철폐, 사회보호 정책 강화, 세계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 이행 강화,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 보장,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이동 실현,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원칙 이행,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구집단별 불평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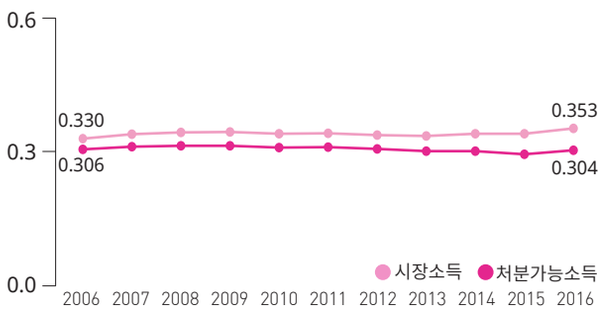
10.1	**하위 40% 인구 소득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달성**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증가율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유 **지니계수**
10.2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증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10.3	**차별적인 법규 철폐와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10.4	**사회보호정책 도입과 높은 수준 평등 달성**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 비율
10.5	**전 세계 금융시장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6	**국제 금융기구에서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
	10.6.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10.7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이동 실현**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10.b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 장려**
	10.b.1 개발 재원 흐름[공여국, 수원국, 재원 형태별(예:ODA,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10.c	**이주자 송금비용을 3% 미만으로 감소**
	10.c.1 총 송금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소득 불평등

소득분배의 대표적인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OECD 권고에 따라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0.295에서 2016년 0.304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의 재배분 정책효과를 반영한다. 이에 의하면 정부정책효과는 2006년 0.024에서 2016년 0.049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미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1, 영국은 0.351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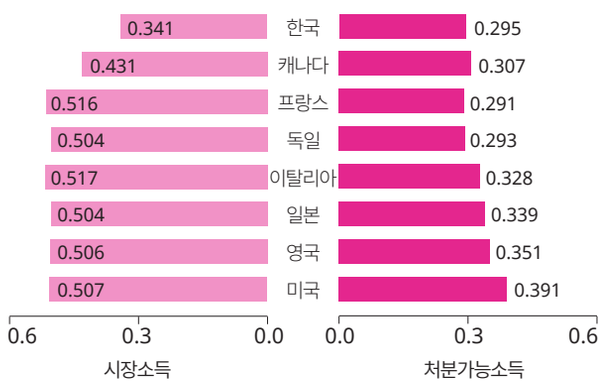
주 1: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함

2: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

3: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지출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4: 2016년부터 공식분배지표 자료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지니계수 국제비교: 2016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rverty Database

주 : 한국 · 독일 · 일본은 2015년 자료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에 따르면 현재 55%인 도시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6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UNDESA, 2018). 도시는 직업, 교육, 보건 및 위생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화는 빈곤 인구 증가, 슬럼(slum)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SDGs 안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목표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환경 및 교통 개선, 통합적 도시 계획 및 관리,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감소, 문화유산 보호,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11.1 적정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슬럼 개선

- 11.1.1 슬럼, 비공식 정주공간 혹은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1.2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유)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11.3 통합적, 지속가능한 정주지 계획, 관리

-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이용 비율
- 11.3.2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 비율

11.4 세계문화유산 보존 노력 강화

-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11.5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

-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11.6 대기질과 폐기물 관리

-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 11.6.2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예: PM 2.5, PM 10)

11.7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공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11.7.1 도시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발생장소별)

11.a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역할강화

-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도시크기별)

11.b 재난 복원력 강화

- 11.b.1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1.c 최빈개도국 자원을 사용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축 지원

-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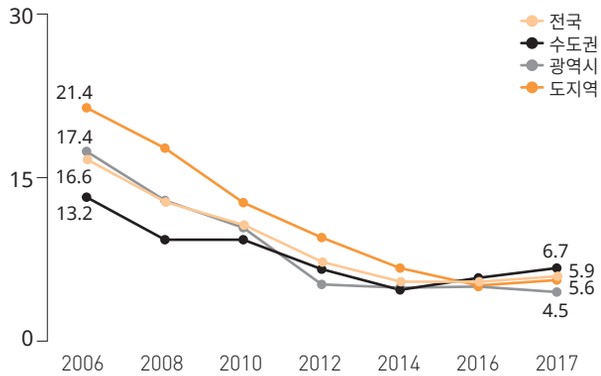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주거 환경

슬럼은 극단적인 빈곤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물, 위생시설, 충분한 거주공간, 주택 내구성, 소유권 등이 결핍된 생활공간을 의미한다(IAEG-SDGs, 2018c).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공식 데이터가 아직 한국에는 없으나,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2006년 16.6%에서 2017년 5.9%로 10.7%p 감소하였다.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내에서 지역별 분포는 달라졌다. 2006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도지역, 수도권, 광역시 순으로 많았으나 2017년에는 수도권, 도지역, 광역시 순으로 바뀌었다. 이는 수도권의 1인가구 증가와 소형주택 공급확산으로 인하여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국토연구원,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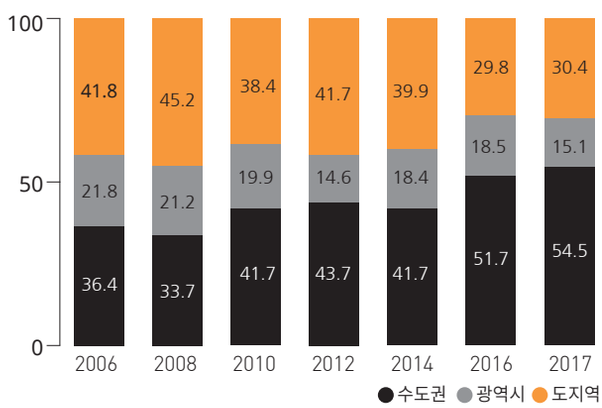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 면적,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의미함

2: 수도권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됨에 따라서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도지역에서는 경기도가 제외되었음

3: 2006년 이후 격년 단위로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2017년도 이후부터 매년 시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역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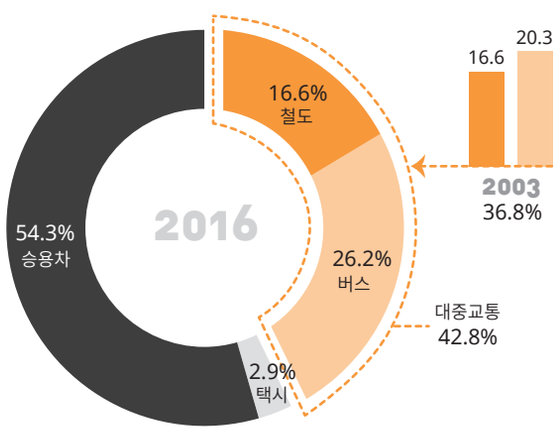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대중교통 접근성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저소득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차원뿐 아니라 교통혼잡, 오염물질 배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대중교통 접근성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한국은 그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36.8%에서 2016년 42.8%가 되었다. 이 중 철도와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6%, 26.2%로 주로 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주 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대중교통 여객수송실적/육상교통수단 총 여객수송실적)X100

2: 교통수단에는 승용차, 택시, 철도(지하철 포함) 등이 포함되고 이 중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철도임

3: 수송실적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 인-km 단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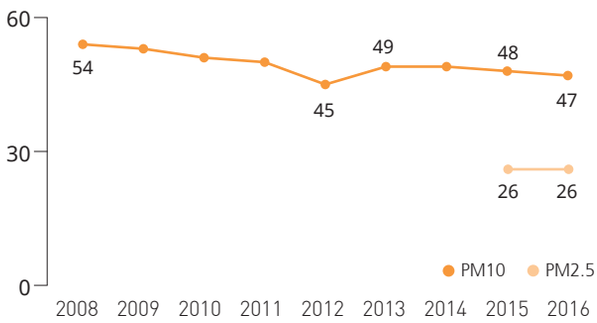
대기질 관리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한다.

PM10은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 PM2.5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PM10의 최근 농도변화를 보면 2012년 45㎍/㎥를 보인 이후 2013년에 49㎍/㎥로 증가하였고 2016년은 전년에 비해 1㎍/㎥ 감소한 47㎍/㎥를 보였다. 201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PM2.5의 농도는 변화없이 2016년에도 26㎍/㎥를 나타냈다. 세계 주요 도시별로 보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런던, 도쿄, 파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6대 광역시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연간 미세먼지 농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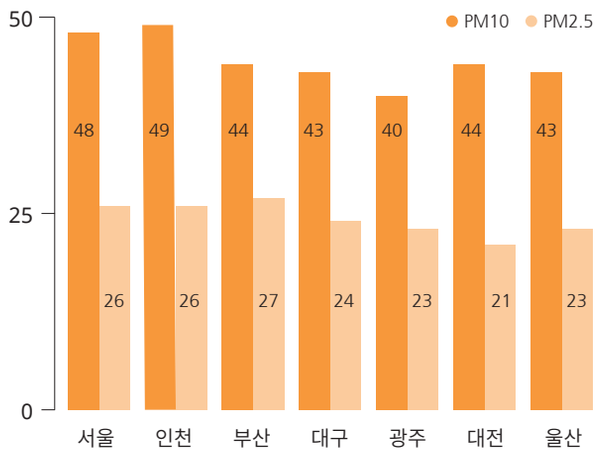
(단위: ㎍/m³)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주 : PM 2.5는 201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음

특별시 · 광역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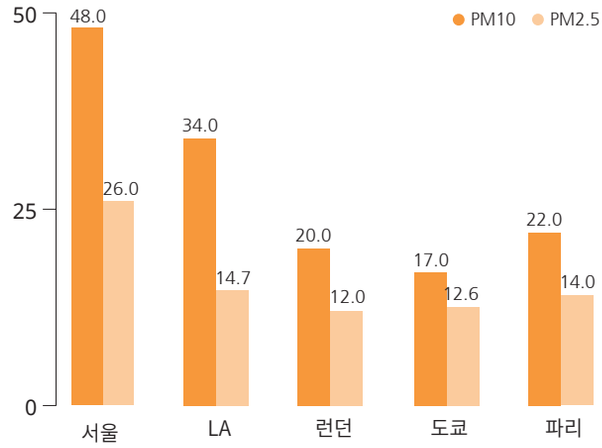
(단위: ㎍/m³)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 2016

(단위: ㎍/m³)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주 : LA의 PM2.5 농도는 US-EPA 공식사이트 수치로 대기환경연보 2016 수치와 다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인류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 황폐화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소비와 생산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등장한 이슈로,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자연자본과 생산성, 경제활동과 역량 증진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KOICA, 2015). 이에 SDG12는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음식물쓰레기 감축,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 화석연료 사용 합리화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해 지구의 자원과 역량을 지속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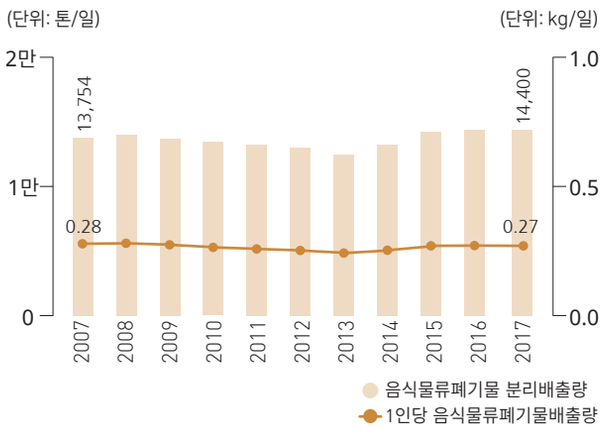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국가실행계획이나 이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2.2	**천연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발자국
	12.2.2 국내 물질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12.3	**음식물쓰레기 감축, 식품공급단계에서의 식량 손실 최소화**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12.4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및 배출 경감**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 당사국 수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유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12.5	**폐기물 발생 감축**
	12.5.1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 유 **폐기물 재활용 비율**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 시행**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12.8	**지속가능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제공, 인식 함양 노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개도국 과학 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개도국 지원 금액
12.b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개발,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갖추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 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
12.c	**화석연료보조금 제도 개선**
	12.c.1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액 및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손실을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핵심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이나, 2017년 기준 한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1만 4400톤으로 2007년 1만 3754톤에 비해 4.7% 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2017년 기준 하루에 0.27kg으로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밥 1개(0.21kg)보다 많은 양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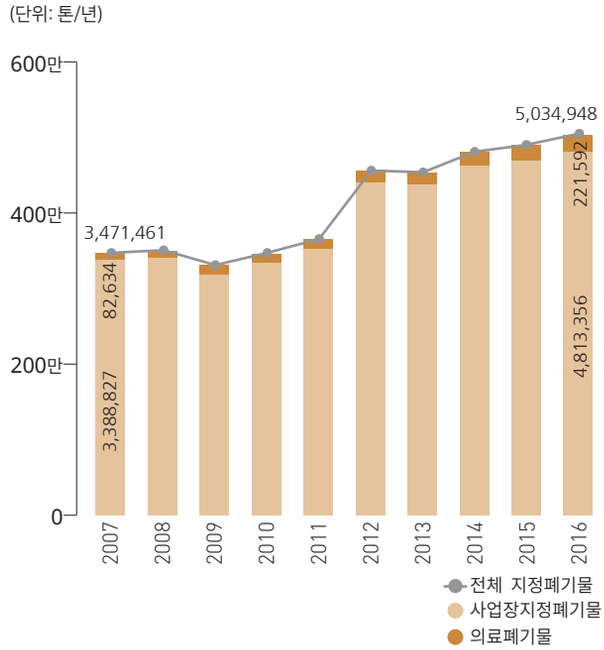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은 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된 폐기물을 의미함

유해 폐기물

한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매년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2007년(347만 1461톤)에 비해 45% 증가한 503만 4948톤이 발생하였다. 이 중 95.6%인 481만 3356톤이 사업장지정폐기물이며, 4.4%인 22만 1592톤이 의료폐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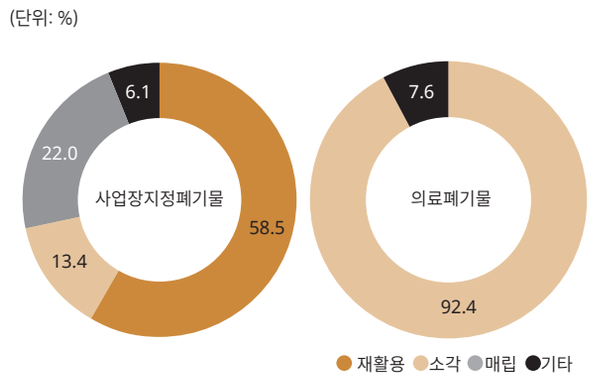
2016년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사업장지정폐기물은 58.5%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22.0%)되거나 소각(13.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폐기물은 대부분 소각(92.4%)되고 나머지는 멸균분쇄하거나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처리된다.

지정폐기물 발생량



출처: 환경부,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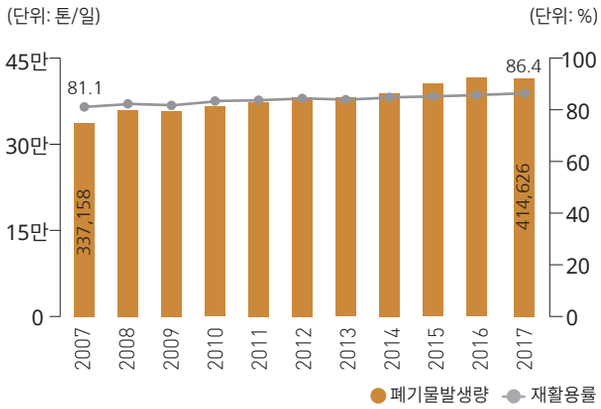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 기타=(기타 처리량 + 최종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 값이며, 멸균분쇄(자가)와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임

폐기물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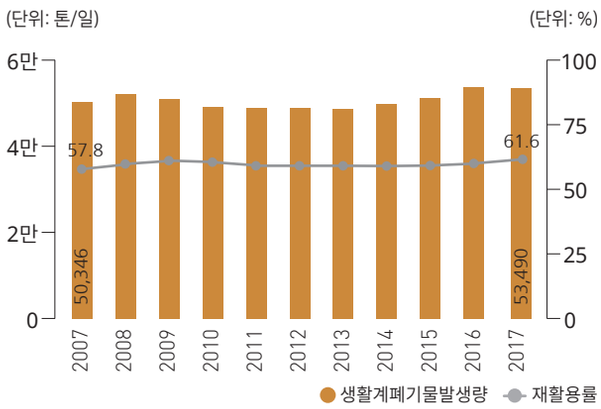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2017년 일평균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41만 4626톤이며, 이 중 86.4%인 35만 8271톤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2017년 일평균 발생량인 5만 3490톤의 61.6%(3만 2932톤)가 재활용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비율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성됨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비율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 생활계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 수치임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인 위협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06년에 비해 0.74℃ 상승하였으며,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상승하면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의 후속조치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에 합의하였다. SDG13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에 주목하면서 그 영향을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세부목표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adaptive capacity) 강화, 국가 계획과 전략에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통합,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1 기후변화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1.2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3.2 국가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조치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온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등을 포함) 유 **온실가스 배출량**

13.3 기후변화 관련 교육, 제도적 역량 강화

13.3.1 기후변화 적응, 완화, 영향 저감, 조기 경보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의 수

13.3.2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온 국가의 수

13.a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원 동원 약속 이행

13.a.1 약속된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한 2020–2025년 모금액(연도별)

13.b 최빈개도국 기후변화 계획,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매커니즘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기술, 역량배양을 비롯한 특별지원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수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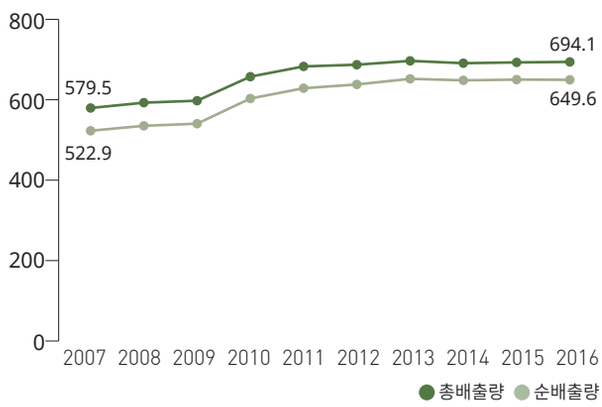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교토의정서는 6개의 온실가스를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하였다. 여기에는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이 포함된다.

2016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579.5백만톤CO_2eq.)보다 114.6백만톤CO_2eq. 증가한 694.1백만톤CO_2eq.이다. 여기에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부문의 흡수량 44.5백만톤CO_2eq.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49.6백만톤CO_2eq.이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로 87.1%이며, 산업공정 7.4%, 농업 3.1%, 폐기물 2.4% 순이다. 한편, 실질 GDP 대비 총배출량은 2016년 459.7톤CO_2eq./1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1인당 총배출량은 13.5톤CO_2eq.으로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주요국과 GDP 대비 배출량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0.396kgCO_2eq./USD로 미국(0.4)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0.281)이나 독일(0.261)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순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톤 CO_2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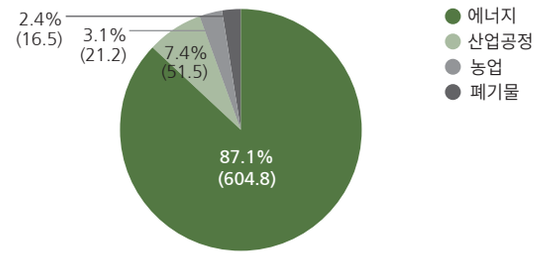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주 1: 순배출량 = 총배출량 +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2: CO_2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에 따라 주요 직접 온실가스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를 의미함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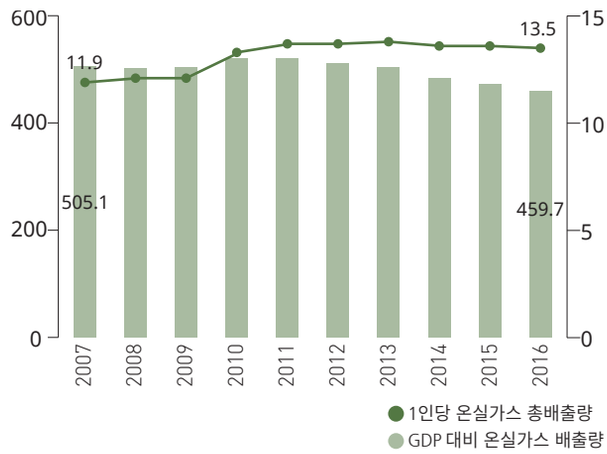
(단위: %, 백만톤 CO_2eq.)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실질 GDP 대비 및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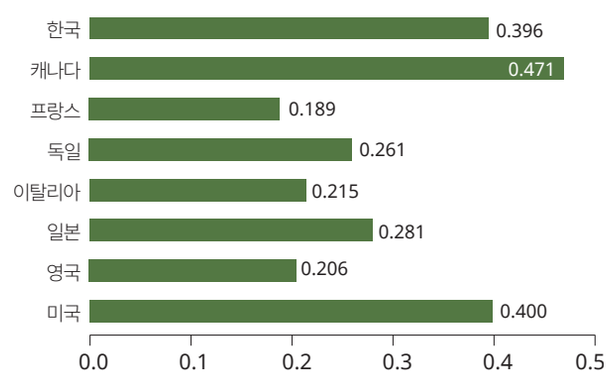
(단위: 톤CO_2eq./10억 원) (단위: 톤CO_2eq./명)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비교: 2015

(단위: kgCO_2eq./USD)



출처: OEC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은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산성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산성화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흡수되면서 해양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산업혁명 시점과 비교할 때 산성의 세기가 26%가량 강해졌다. 이는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14] 해양의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SDG14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보호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상충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도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오염을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자원 이용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14.1.1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유) **해안쓰레기 현황, 전국 연안의 수질평가지수(WQI) 분포**

14.2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호, 복원 조치 시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

14.3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14.3.1 합의된 조사 정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수소이온농도(pH)

14.4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어획규제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종식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14.5 법과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연안, 해양 보전

14.5.1 전체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

14.6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

14.6.1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14.7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최빈개도국 경제적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최빈개도국 해양건강성을 위한 해양 관련 과학기술, 연구역량 발전 및 기술 이전

14.a.1 전체 연구 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 대한 해양자원, 시장 접근 지원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적용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척도

14.c UN해양법협약 이행을 통한 해양과 해양 자원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14.c.1 UN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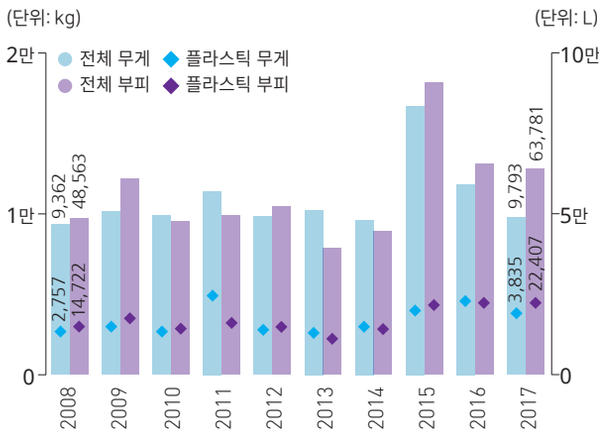
14 중앙일보 2017년 10월 23일자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 해수 산성화 26%증가"

해양오염

해양오염원은 생활폐기물 뿐 아니라 농·어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으로 인한 하·폐수와 쓰레기 등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지표로 제시된 연안의 부영양화[15]지수나 부유성 플라스틱 밀도는 육상활동에서 기인하는 오염의 척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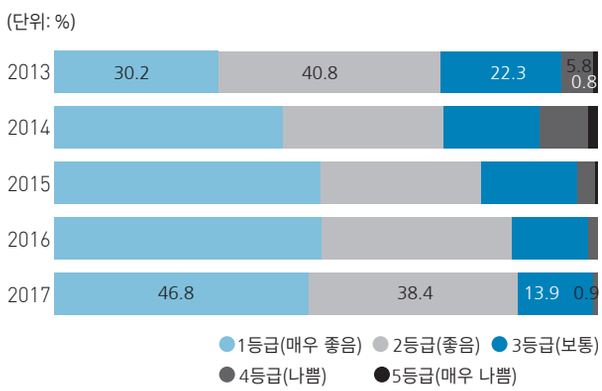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동, 서, 남해 연안 40곳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해안쓰레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안쓰레기는 2017년 기준 그 무게는 9793kg, 부피는 6만 3781L였다. 이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무게의 39.2%인 3835kg, 전체 부피의 35.1%인 2만 2407L이다.

해안쓰레기 현황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

전국 연안의 WQI 분포



출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주 1: 해수수질등급은 해수의 수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다섯 가지 수질지표(용존산소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를 조합하여 산정한 수치로 5개 등급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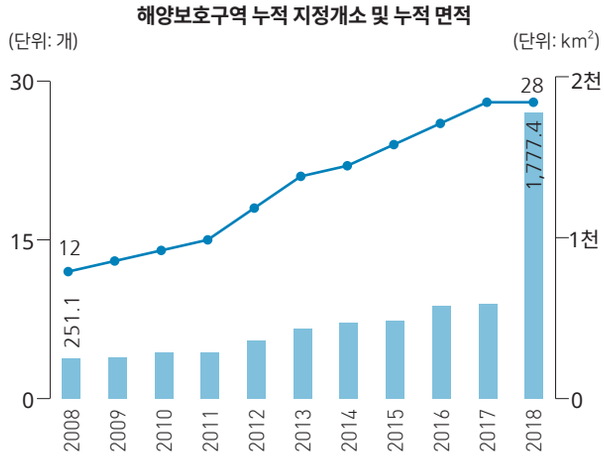
2: 조사정점수는 2013년 377개, 2014년 417개, 2015년 417개, 2016년 417개, 2017년 425개임

한국의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에 따르면, 수질이 매우 좋음과 좋음을 의미하는 1,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전국 연안 425개 정점의 약 85%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측정결과를 보면 수질 1,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고, 4등급은 1-9% 사이, 5등급은 2% 이내였다. 특히, 2016년 이후로 수질 5등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4등급 또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현재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777.4㎢에 이른다. 해양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251.1㎢에 비해 약 7.1배 증가하였다.

해양보호구역 누적 지정개소 및 누적 면적



출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15 부영양화(eutrophication)란, 강,바다,호수 등에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어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증가하여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SDG15는 생물다양성 유지와 육상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은 생태계가 주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존하여 살고 있기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생태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DGs에서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SDGs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세부 목표들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산림, 습지, 산지, 건조지대, 호수 생태계 등 생태계 유형별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처를 보존 · 복원하고 외래 생물종의 유입을 차단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계획과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15.1	**산림, 습지, 산지, 건조지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훼손 산림복원 및 신규조림 및 재조림 증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진전
15.3	**사막화 방지, 훼손된 토지와 토양 복원**
	15.3.1 전체 국토면적 대비 훼손된 토지면적 비율
15.4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
	15.4.1 산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보호구역 지정면적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15.5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유 **한국의 적색목록 현황**
15.6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접근성 보장**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불법 밀렵, 밀거래 종식**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15.8.1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와 통제에 대한 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국가 비율
15.9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국가 계획 마련**
	15.9.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 2(생물다양성 가치 통합)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 지원**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증진 및 보호종의 밀렵, 밀거래 방지**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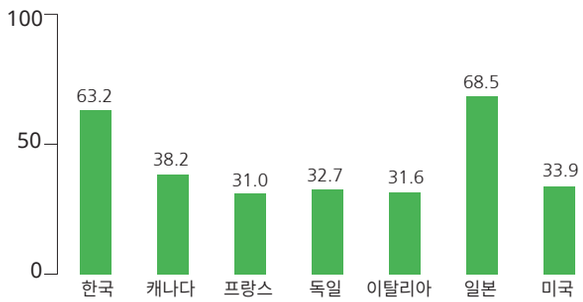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육상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산림은 목재 및 비목재 생산물 제공,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제공 및 토양과 수자원 보존 등의 기능을 한다. 2015년 기준 한국 산림면적은 633만 4615ha로 전체 국토면적의 63.2%이며 미국(33.9%), 캐나다(38.2%)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16] 그러나, 산림이 도로 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636만 8843ha에 비해 0.54% 정도 줄어들었으며, 산림경영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약 623만ha가 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하고 있다.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국제비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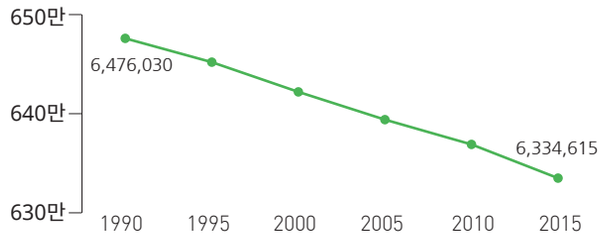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FAOSTAT

산림면적

(단위: ha)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멸종 위기종 보호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은 적색목록(Red list)을 통해 야생생물의 멸종 위험수준을 범주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범주와 기준을 보완한 국내 적색목록에 따르면 위급(58종), 위기(169종), 취약(306종) 범주를 합한 멸종우려(Threatened) 종은 533종에 이른다.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로 평가 될 수 있는 준위협(Near Threatened) 상태의 야생동물도 268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색목록 평가 현황: 2018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연체동물	육상식물	거미류	합계
절멸(EX)	1								1
야생절멸(EW)									
지역절멸(RE)	5	3		1	1			2	12
위급(CR)	1	1		4	12	4	28	8	58
위기(EN)	4	18	5	13	22	19	86	2	169
취약(VU)	9	36	5	9	74	57	110	6	306
준위협(NT)	1	8	2	14	34	82	56	71	268
관심대상(LC)	11	28	23	20	511	583	97	487	1,760
정보부족(DD)	4		4	5	380	923	40	128	1,484
미평가(NE)	4		3	10	3,491	264	126	11	3,909
미적용(NA)	1	1	1		28	31			62
합계	**41**	**95**	**43**	**76**	**4,553**	**1,963**	**543**	**715**	**8,029**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

주 1: 절멸(Extinct, EX):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

2: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 절멸한 상태이나 동식물원 등지에서 사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

3: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서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방문자 분류군이었으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사라진 분류군을 의미

4: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

5: 위기(Endangered, EN):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

6: 취약(Vulnerable, VU):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

7: 준위협(Near Threatened, NT): 현재에는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 우려 범주로 평가 혹은 근접할 수 있는 상태

8: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현재에는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

9: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

10: 미평가(Not Evaluated, NE):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군에 적용하는 범주로 정보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을 반영하지 않음

11: 미적용(Not Applicable, NA): 지역수준에서 평가하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류군

16 산림면적 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4위이다(www.mdex.go.k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의 주춧돌이다. SDG16은 폭력의 감소,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과 법치 증진, 부정부패 감소,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도 개발과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인권과 자유를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6.1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연령별) (유) **살인범죄 피해자 성 및 연령별 특성**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 (성, 연령, 사유별)
-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유)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 16.2.3 18–29세 성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법치 증진 및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16.3.2 교도소 수용자 중 미결수 비율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

-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 16.4.2 무기 중 불법성이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감소

-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 비율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 구축

-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섹터별 혹은 예산코드별)
-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7.1 공공기관 보직 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주요 인구집단별)
-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그외 인구집단별)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참여 확대

- 16.8.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16.9 출생등록 등 모두에게 법적 지위 부여

- 16.9.1 5세 미만의 출생 신고 비율(연령별)

16.10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기본적 자유 보호

-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 16.10.2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등을 위해 국가별 관련 제도 강화

- 16.a.1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분석에 활용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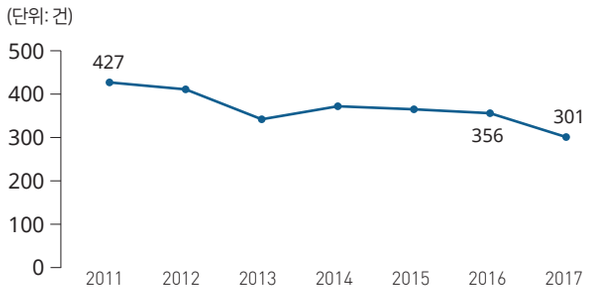
(유) 국내 유사 지표

폭력 감소

살인기수 범죄 피해자 수는 2011년 427명에서 2017년 30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피해자 특성을 보면 모든 조사시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피해 비율이 일관되게 높다.[17]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6세 이하와 51세 이상의 비율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6세 이하의 비율은 2011년 3.8%에서 2017년 8.3%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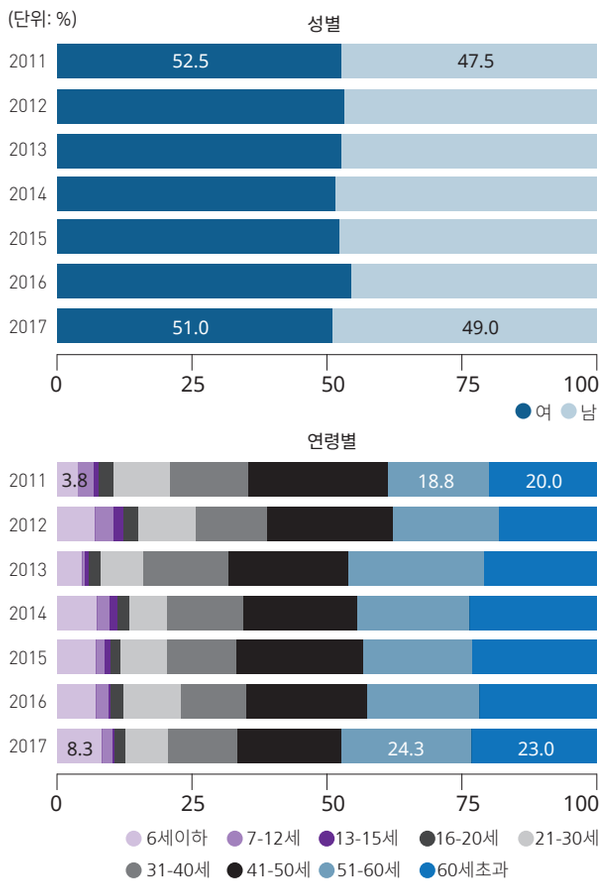
범죄두려움 또한 조사된 이래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에 42.4%로 가장 높았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7%로 낮아졌다(최수형 · 조영오, 2017).

살인기수 범죄 피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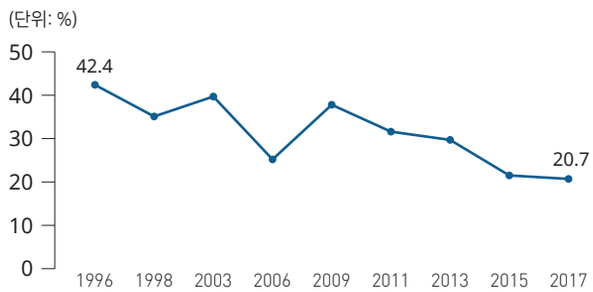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2017 경찰통계연보
주 : 살인범죄는 살인기수와 살인미수로 구분되나, SDGs 지표(16.1.1) 정의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 사망에 이른 살인기수 건을 제시하였음

살인기수 범죄 피해자의 성 및 연령별 특성



출처: 경찰청, 2017 경찰통계연보
주 : 성 및 연령은 미상을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함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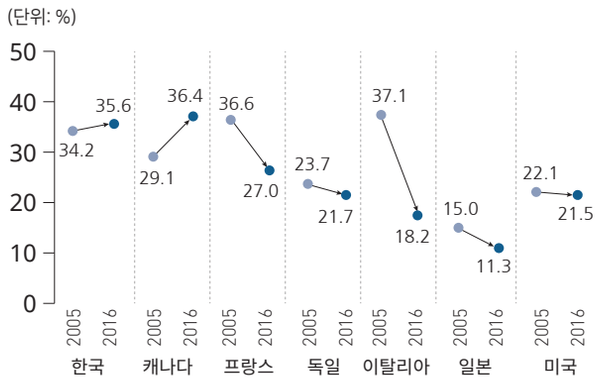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 범죄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문항에 '약간 두렵다'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미결수용자 현황

미결수용자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로 추정되고 처우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계인권선언 등에 제시되어 있다(최영실 외, 2014).

국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보면, 2005년 34.2%에서 2016년 35.6%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캐나다와 비슷한 수치이다. 한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미결수용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그중 이탈리아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미결수용자 비율 국제비교



출처: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주 : 2005년은 2003-2005년의 평균, 2016년은 2014-2016년의 평균임

17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통계만 입력된다. 따라서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된 피해자의 수와 특성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며, 추이를 본다는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박준휘 외, 2018).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17은 성공적인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 기타 관련 행위자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행동 지침의 완벽한 구현을 통하여 전 세계가 동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및 내륙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7.1	**개도국에 대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
	17.1.1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재원별)
	17.1.2 예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
17.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책무 이행**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 비율
17.3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 동원**
	17.3.1 정부예산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17.3.2 GDP 대비 송금액 비율(US달러 기준)
17.4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 채택 및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에 대한 남북, 남남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형태별)
	17.6.2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금액
17.8	**최빈개도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구현기술 활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등을 통해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
	17.9.1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17.10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을 통해 평등한 다자무역체계를 증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개도국의 수출 증가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 두 배 증가**
	17.11.1 전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17.12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시장 접근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를 사용하는 정도
17.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
	17.17.1 민 · 관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
	17.18.1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통계계획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재원별)
17.19	**국내총생산 측정 보완으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a)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였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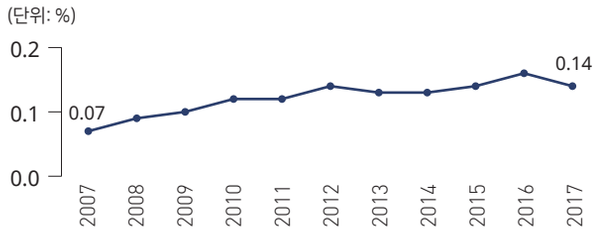
□ 분석에 활용한 지표

유 국내 유사 지표

공적개발원조 규모

한국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비율은 2017년 0.14%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2000년 이래 ODA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DAC) 가입 당시 목표했던 0.2%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2017년 DAC 회원국 전체 평균 비율은 0.31%이며, ODA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1.01%)과 룩셈부르크(1.00%)이다. 한국은 29개 국가 중 25번째이다.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출처: OECD, DAC Statistics database

OECD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2017

출처: OECD, DAC Statistics database

5장

SDGs 데이터 격차 해소 전략

1. 미래지향점으로서의 SDGs 지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책 구현에 필요한 통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정책 필요성을 예측하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할 수는 없을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통계 생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DGs는 통계인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근거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DGs를 국내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169개 세부목표와 232개 지표에는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한국에서 이행해야 하는가?"이다. SDGs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달성했거나 한국적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달성여부 혹은 맥락 부합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SDGs에서 지향하고 있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라는 포용성 전략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러하다.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이라는 세부목표 이행을 평가하는 지표인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성기절제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을 생각해 보자.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이 세부목표와 지표는 국내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일견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계층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숨겨져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구에 거주하는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의식 없이는 해당 세부목표의 달성과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232개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최소한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데이터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232개 글로벌 지표의 개념정의서라고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상황 점검의 준거가 된다. 본 장에서는 메타데이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 및 측정산식에 근거하여 국내 데이터 가용성을 진단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UN의 티어체계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UN 티어체계의 한 축인 데이터 가용성은 그 기준이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혹은 인구가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에도 해당 지표가 티어 2로 분류될 수 있고, 국내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티어 1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SDGs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UN 티어 체계와 함께 국내의 분류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계개발원은 데이터 가용성과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즉 글로벌 DB 내 한국 데이터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232개 지표를 A, B, C의 세 층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통계가 생산되어 국제기구에 제공되고 있다면 A, 국내에 유사한 통계가 있는 경우 B, 지표 정의에 맞는 새로운 통계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C로 분류하였다. A는 해당 통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지표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경우 A1, 지표 정의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A2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한편 A, B, C가 양적인 지표라면 개별 국가 차원의 법, 제도 및 정책의 유무 혹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정책 모니터링과 관련한 질적 지표를 D로 별도 분류하였다.

데이터 가용성 및 국제기구 데이터 제공 여부에 따른 SDGs 지표 분류체계

분류기준	결과
A. 관련 통계가 있어서 국제기구에 자료 제공	71
A1. 지표 정의에 완벽하게 충족된 경우	59
A2. 지표 정의에 부분적으로 충족된 경우	12
B. 국내 유사 통계 존재	25
C. 통계 및 지표 개발 필요	82
D. 질적 지표	54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표가 현재 개선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1조차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글로벌 DB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데이터의 출처 및 수치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은 공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견되었다. 지표 정의에 충족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가 국내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일개의 사례가 아닌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본 후 SDGs 데이터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방법론 개발,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절차별로 이슈들을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살펴보았다.

SDGs 데이터 전략 도출 단계

2. 데이터 검증절차 및 주요 발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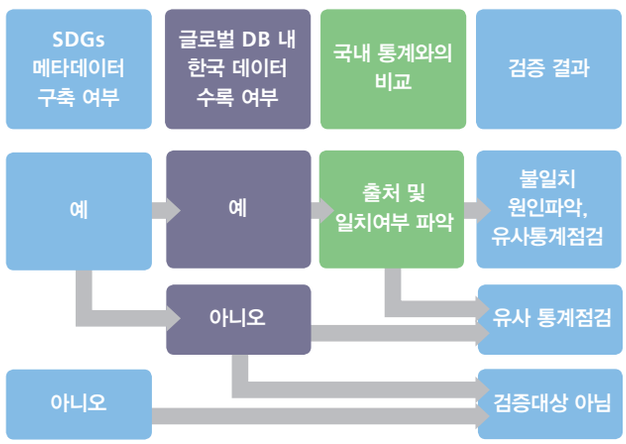
1) 검증절차

데이터 검증을 위해 232개 SDGs 지표를 주제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17개 목표에 따라서 지표를 분류할 수도 있으나 SDGs는 목표 간에 상호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다른 목표의 지표와 같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는 유사한 주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30여 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18]

데이터 검증은 주제지표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한국지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였고, 관계자가 중첩되거나 함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성평등지표 협의체와 성폭력 관련 지표가 포함된 범죄지표 협의체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영양지표 협의체와 건강지표 협의체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협의체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었다.

업무로지스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지표 협의체는 SDGs 지표 메타데이터에 근거하여 지표의 개념과 정의, 산출방식을 인지하고 글로벌 DB에 수록된 한국 데이터 출처와 수치를 파악한 후 해당 국내 통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통계와의 비교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또한 글로벌 DB에 있는 한국 데이터 이외에 지표 개념에 부합하는 더 좋은 국내 통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직 방법론이 개발 중인 지표(UN 티어 3)를 포함하여 메타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표 개념과 산출방식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DGs 데이터 검증 절차



2) 주요 발견사항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책임이다. 데이터 제공 이후의 활용은 국제기구의 몫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국제기구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순위를 매기고 개별 국가를 평가한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타당한 통계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다음의 사항들은 글로벌 DB의 한국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글로벌 DB의 한국 데이터 중에는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가 있다. 국제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입수한다.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자료를 입수할 뿐 아니라 통계청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제3자(개인 혹은 기관)로부터 받거나 연구논문에서 수치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승인통계가 제공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였으나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 민간에서 작성된 경우, 다른 국제기구에서 활용 중인 한국 데이

18 경제, 고용, 관광, 교육, 교통, 국제관계, 국토, 기후변화, 농업, 대기, 무역, 문화재, 물과위생, 보건, 복지, 범죄, 사회통합, 산림, 생물다양성, 성평등, 에너지, 자원, 재난, 정의, 정책, 통계, 폐기물, 해양, IT, ODA, R&D이다(가나다 순). 지표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터를 재인용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이 어째서 문제일까?

한국 통계청은 승인통계에 한해서는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19] 이외 출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품질관리 방안이 없어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국가별 평가 결과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제공 경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둘째, 출처가 확인된 글로벌 DB의 데이터와 해당 출처의 국내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치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게다가 데이터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잣대로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별 국가들이 국제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국내의 분류체계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분류코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직업, 산업, 범죄 등과 관련된 국제분류체계는 국가의 맥락에 맞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SDGs 지표 메타데이터에서 요구하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여성 관리자 비율(지표 5.5.2)은 '중간 및 고위 관리직에 고용된 사람 중 여성의 비율'로 정의되며,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에 따라 계산된다.[20] 그런데 이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자살 사망률(지표 3.4.2)의 경우, 한국 통계청과 WHO 모두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라는 동일한 정의를 따르고 있으나 계산된 수치는 다르다. 불일치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정, 추정,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정과정에서 흔히, 분모통계에 국내의 원 데이터가 아닌 국제적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제기구는 여러 국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한국의 인구규모, 어떤 인구를 사용해야 하나?

한국의 인구는 통계의 종류에 따라 인구총조사인구, 추계인구, 주민등록인구로 구분된다. 각 인구는 작성범위, 기준시점, 작성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인구를 사용해야 한다(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인구는 11월 1일 0시 기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이다. 2010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나, 2015년부터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상주인구 개념을 근간으로 보완하여 매년 인구를 작성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에서 해외거주자와 사망신고 지연자를 제외하고, 출생신고 지연자를 더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및 단기불법체류자 자료를 기반으로 출입국자료로 보완하여 산출한다. 인구총조사인구는 인구 규모 뿐 아니라 구조나 특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정책입안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추계인구는 인구총조사인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인구이동)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추계한 인구이다. 과거인구에 대한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구변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한다. 인구총조사의 누락인구를 보정한 자료로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주민등록인구는 매월 말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신고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되 말소자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인구는 매월 집계되는데, 인구분야에서 출생률 및 사망률과 같이 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률(rate) 산출을 위하여 해당연도를 대표하는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가 사용된다. 연앙인구는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인구로 전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산술평균하여 작성한다.

19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청은 유사중복, 신뢰성 미확보, 영리 목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계생산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승인통계로 칭하는데, 승인통계는 통계청 관리 대상으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받게 된다. 통계청은 승인통계에 한해서 5년 주기로 정기진단을 한다. 작성기관 또한 매년 자체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품질 진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품질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수시품질진단도 하고 있다. 한편 품질관리에서 고려되는 여섯 가지 기준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이다.

20 글로벌 지표 정의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성인구 ISCO08 분류1-ISCO08분류14) / (전체인구 ISCO08 분류1-ISCO08분류14)] × 100 혹은 [(여성인구 ISCO88 분류1-ISCO88분류13) / (전체인구 ISCO88 분류1-ISCO88분류13)] × 100

것을 우선시하므로 개별 국가의 자료가 신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준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UN 인구처(UN Population Division, UNPD)의 추계인구가 대표적인데, 이는 국내에서 계산된 인구와 다르다(앞쪽의 상자글 참조). UNPD는 223개국에 대한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을 통해 1950년부터 2100년까지의 연령 및 성별 인구,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SDGs 목표 중 12개 목표에서 UNPD 인구를 사용 중이다. 특히 해당 목표의 지표 중에서 UNPD 인구를 사용하는 지표 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목표 3(19개, 79%), 목표 4(9개, 100%), 목표 5(7개, 58%)이다(IAEG-SDGs, 2018d). 인구뿐 아니라 경제적 단위의 비교가 되는 GDP의 경우에도 국제기구 보정과정에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기준 GDP가 사용된다. 국토 및 해양 면적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에서 측정한 면적과 글로벌 기준의 면적 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인 외에 데이터 갱신 주기의 차이로 인해 수치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국제기구에 자료가 제공된 이후에 시계열 등의 보정작업이 진행되어 데이터가 수정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즉각적으로 국제기구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성 관리자 비율 지표의 경우가 그 사례였다. 이 지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산출되며, 지표 소관기구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통계 작성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시계열자료(2000-2017년)를 보정하였으나 그 결과가 국제기구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부 시점에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넷째, 현재 글로벌 DB에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SDGs 개념에 부합하는 국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지표 16.1.4)은 아직 국내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범죄 두려움 통계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범죄 두려움 통계가 SDGs 지표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데이터 검증을 통해 발견된 쟁점은 첫째 데이터 출처의 공식성 여부, 둘째 국가상황에 따른 개념 차이, 셋째 국제비교 과정에서의 데이터 불일치, 넷째 국내 유사 통계 존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SDGs 지표 작성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을 기준으로 국내 통계의 보완이 필요한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표별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지표별 데이터 격차 이행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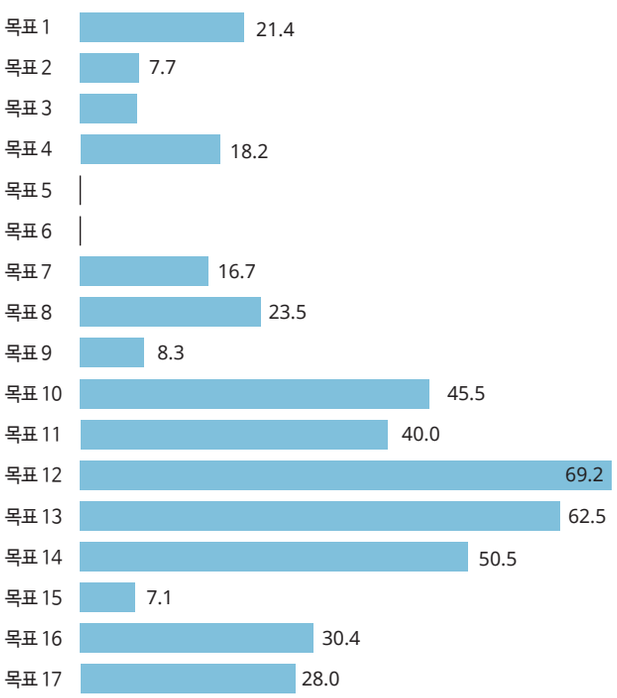
1) 개념정의 등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는 지표군

● 글로벌 수준에서 방법론 개발이 진행 중인 지표

다른 지표 프레임워크와 가장 구별되는 SDGs 지표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아직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아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지표(UN 티어 3)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SDGs의 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티어 3 지표가 어느 분야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발전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현재 티어 3에 포함되는 지표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62개이다. 목표 5와 목표 6에는 티어 3 지표가 전혀 없는 반면 목표 12, 13, 14에는 50% 이상의 지표가 티어 3에 속해 있다. 이들 목표는 환경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환경분야 지표의 개발이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향후 데이터 생산을 위해 통계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방법론 개발이 진행 중인 지표(티어 3) 비율

(단위: %)



티어 3 지표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수의 분야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방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면적 비율(지표 2.4.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지표 4.7.1),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 비율(지표 8.9.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개도국 지원 금액(지표 12.a.1), 군소도서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지표14.7.1) 등이 그러하다.

둘째, 통계시스템이 비교적 확고한 ODA 통계[21]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출처 외에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이 포함되거나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개념(지표 12.a.1, 지표 17.7.1)이 등장하면서 현재의 공여국 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분야코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도 다수 있다.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지표 4.2.1),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지표 16.6.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지표 16.7.2),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지표 16.b.1)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티어 3에 속하는 지표는 소관 국제기구의 방법론 개발 계획에 따라 개념정의 및 데이터 생산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방법론 개발은 국제기구만의 역할은 아니다. 개발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참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개념 정의 단계에서부터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표 방법론 개발 과정에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될 수 있다.

한국 통계청은 UN 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소관 지표인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만족하

글로벌 수준에서 방법론 개발이 진행 중인 지표(티어 3) 목록

1.a.1	정부가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한 국내 재원 비율
1.a.3	GDP 대비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비부채성 자금유입과 총 보조금의 합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의 경상 및 투자 지출 비율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면적 비율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보장범위
3.b.3	적당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7.b.1	지속가능한 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 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8.4.1	물질발자국,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발자국
8.8.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의 국가별 준수 수준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 비율
9.1.1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 비율
11.3.2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 비율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 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21 국내 ODA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ODA 통계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국내 원조기관으로부터 ODA 통계 내역을 보고받고 동 내역을 검토 · 수정 · 취합하여 OECD로 최종 보고한다.

11.7.1	도시에서 공공 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성, 연령, 장애여부, 발생장소별)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도시크기별)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율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1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개도국 지원 금액
14.1.1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
14.3.1	합의된 조사 정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수소이온농도(pH)
14.7.1	군소도서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사유별)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16.4.2	무기 중 불법성이 확인된 비율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1	공공기관 보직 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주요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 금액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7.1	민 · 관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USD 금액
17.18.1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주 : 티어 3에 속하는 지표 중 국가의 제도, 정책, 전략 유무를 측정하는 질적 지표는 제외하였음. 한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티어 3 지표의 방법론개발이 완료되어 IAEG-SDGs에서 티어변경이 승인된 지표(2.4.1/3.b.3/8.8.2/9.1.1/10.5.1/10.7.1/11.3.2/11.7.1/14.3.1/17.13.1)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둠

는 인구 비율(지표 16.6.2)과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지표 16.7.2)에 관한 방법론 개발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개발된 조사표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함께 개별 조사항목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다(다음 쪽의 상자글 참조).

● 국내에서 방법론 합의가 필요한 지표

글로벌 수준에서 개념 및 측정방법론이 확정되었더라도 국내 맥락과의 개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첫째, 글로벌 수준과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표 자체에서 국가별 정의를 요구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성 및 연령별 비율(지표 1.2.1),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지표 1.2.2) 등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빈곤선의 기준, 즉 다차원 빈곤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선진국의 경우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사용해 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 제도에서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고 있다(사회보장위원회, 2018). 다차원 빈곤지표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 영역과 각 영역의 가중치 등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이다(김문길 외, 2017).

둘째, 국제기구의 지표 작성 방법론에 대한 국내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국제기구에서 추정 및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글로벌 DB의 한국 지표 중 국가 데이터가 그대로 수록된 것이 아닌 추정된 경우는 25개, 모델링된 경우는 4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 지표의 방법론 개발 과정

지표소관기구

UNDP

주요 일정

2018년 10월까지 방법론 개발 완료 후 2019년 3월 제9차 IAEG-SDGs 회의에 결과 제출 예정

지표 방법론 개발 과정

거버넌스 통계 생산을 위해 국제적인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구축 중인 프라이어 그룹(Praia city group)의 지휘하에 개발하고, 통계청과 국제조사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

① 전문가 회의를 통한 예비 프레임 구축(2017년 4월): 국제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기존 서베이 질문 검토(Afrobarometer and World Value Survey 등)

② 의사결정과정의 포용성과 대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33개 국가(통계청)에서 시험조사 실시: 선거에 대한 공정성 · 정부의 포용성과 대응성 · 시민참여에 대한 의견 등 조사

③ 1차 전문가 그룹 회의(2017년 5월): 지표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됨. 첫째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닌 공식적인 제도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의미할 것, 둘째 정책 실행가능성 관점에서 평가될 것, 셋째 경험적으로 16.7 세부목표와 상관성이 있어야 할 것

④ 10개 국가(통계청) 및 11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된 서베이 질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념적 프레임워크 정교화

⑤ 2차 전문가 그룹 회의(2017년 10월): 1950년대 이후로 정치과학 영역에서 이론적 논의가 잘 구축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지표와의 유사성 논의.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인의 참여능력(포용성)과 정책입안자의 반응(대응성)에 대한 질문으로 압축

⑥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UNDP의 서베이 항목 수정(2018년 1월-6월): 이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내적 효능감(주관적 자신감)과 외적 효능감(시스템적 대응)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관련 항목 선정

⑦ 사회적 바람직성 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정치적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항목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실험방법 제안

⑧ 11개 국가 통계청(2018년 7월-10월)과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파일럿 테스트 실시: 한국 참여

⑨ 방법론 최종 수정(2018년 9월-10월)

참여기관

통계청(한국 포함), 지역수준의 Afrobarometer, Asian/Arab/Latino barometer 조사표 및 ESS 검토, OECD How's life? 및 PIAAC, EU-SILC 등 검토, 그 외 거버넌스 국제 전문가

개이다.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지표 3.8.2)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을 수록해 놓은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이외에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등의 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신형웅 외, 2010). 또한 비농업분야에서의 비공식 고용률(지표 8.3.1)은 비공식 고용에 대한 정의는 명확할지라도 자영업자 등과 같은 특정 생산단위 유형의 비공식 고용률 산출에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지표 14.2.1)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에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국제기구의 방법론 개발 이후 국가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방법론에 대해 국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는 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이전 사례이기는 하나 해당 지표가 현재 프레임워크 내에도 있으므로 참고해 볼 만하다.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로 알려져 있는 교육, 훈련 혹은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지표 8.6.1)이 그 예이다. 이 지표의 소관기구는 ILO인데, OECD에서 지표 제공을 요청한 바 있으나 통계청은 OECD의 NEET 정의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OECD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을 NEET로 정의하고 있으나 비형식교육의 참여범위가 넓은 한국 청년층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아야 하므로 NEET 인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현재 지표 소관기구인 ILO와 NEET 개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자료를 즉시 제공가능한 상황이다. 다

국제기구에서 추정, 모델링 한 지표

	지표명	속성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지역(도시/농촌)별]	G
1.3.1	사회적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 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E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E
3.1.1	모성사망비	E
3.2.1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E
3.2.2	신생아 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E
3.3.2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E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000명당)	E
3.3.4	B형 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E
3.5.2	연간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G
3.8.1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범위	E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	E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E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E
3.a.1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E
3.b.1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인구 비율	E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E
7.1.1	전기 접근 인구 비율	E
7.1.2	청정연료 및 기술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E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E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	E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M
8.4.2	국내물질소비량,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소비량	E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15세 이상)인구 비율	G
9.2.1	GDP 대비 및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M
9.4.1	부가가치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E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 · 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M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 비율	E
10.6.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G
11.6.2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예 PM2.5, PM10)	E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E
15.5.1	적색목록지수	E

만, ILO 청년인구(15-24세)의 정의가 한국(15-29세)과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 협의는 필요하다.

셋째, 국제기구에서 공통으로 조사를 하고 해당 결과를 국가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활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식량불안경험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인구 비율(지표 2.1.2)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 소관기구인 FAO는 월드갤럽폴(World Gallup Poll)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도 그 대상이다. 그런데 식량불안항목이 포함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관기구인 질병관리본부는 FAO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측정항목과 조사주기가 다르다는 쟁점이 있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지표의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통계개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례와 반대로 한국이 조사 참여 국가가 아닌 사례도 있다.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지표 3.3.1)를 산출하기 위해서 UN 에이즈합동계획(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은 별도의 표본조사를 통해 HIV 유병률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 비율(지표 16.5.2)도 마찬가지로 대행기관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데이터의 제공 방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넷째는 해당 지표가 국내 상황에 맞지는 않으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지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출산율(지표 3.7.2), 5-49세 여아와 여성 중 성기절제(FGM/C)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지표 5.3.2), 아동(5-17세)노동 인구 수 및 비율(지표 8.7.1)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성기절제(FGM/C) 관습이 국내에서 없기 때문에 통계생산 필요성이 없으나 최근 국내에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유입되고 한국인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당 경험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의 경우 저소득국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기된 지표이지만 최근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아동의 경제활동이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지표 3.3.5)의 경우에는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외열대질환 치

료가 필요한 질병 하의 항목들이 현재 국내에서 측정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지표보다는 해외유입 감염병자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22]

2) 기존 통계 개선이 필요한 지표군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이 합의되면 다음으로 통계생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방법론이 이미 합의된 지표 중 기존 조사체계 내에서 항목의 추가, 수정 혹은 조사 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조사체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그 정의를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빈도율(지표 8.8.1)은 지금까지는 치명적인 재해와 비치명적인 재해가 구분없이 제공되었으나, SDGs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 지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자료로 제공되는데, 이 자료는 치명적 재해(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어 SDGs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지표 2.5.1)에서는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재난 관련 지표도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지표 1.5.1)에서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에 대한 통계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지표 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지표 11.5.2)은 경제적 손실의 세부항목인 농업, 문화유산 등 손실액에 대한 통계가 불충분하고 금전적인 환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표들의 경우 정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기구에 이미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SDGs 이슈의 등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세분화가 그 예이다. 전통적으로 고려되어왔던 성이나 연령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이외에도 장애 및 이주상태 등이 새로운 세분화 차원으로 요구되고 있다.[23] 직업, 연령 및 장애별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지표 8.5.1), 성, 연령 및 장애여부별 실업률(지표 8.5.2), 성 및 이주상태별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빈도율(지표 8.8.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의 성, 연령

지표 정의 중 일부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1.3.1	사회적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3.3.5	소외열대질환(NDT)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
3.7.2	해당 연령(10–14세, 15–19세) 1000명당 여성 청소년 출산율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기술유형별)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여부 등)
5.5.1	(a)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 (b) 지방정부 여성의석 비율
8.5.1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연령, 직업, 장애여부별)
8.5.2	실업률(성, 연령, 장애여부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빈도율(성, 이주상태별)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17.2.1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 비율

22 성평등 및 범죄지표 협의체(2018년 3월 28일)와 영양 및 건강지표 협의체(2018년 5월 14일)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23 IAEG-SDGs는 데이터 세분화와 관련해서 차원(dimension)과 범주(categorie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차원은 성, 연령 등과 같이 세분화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의미하며, 범주는 특정 세분화 차원 하의 서로 다른 속성으로, 성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범주가 된다(IAEG-SDGs, 2017).

워싱턴 그룹의 장애 항목 측정 방법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도입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애는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가 상이하여 장애통계의 국제비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UNSC는 장애측정과 장애 관련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국제전문가그룹인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을 설립하였다. 워싱턴 그룹은 WHO가 개발한 국제 기능 · 장애 · 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라는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센서스와 표본조사 등에 사용할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Washington Group Short Set on Functioning)를 개발하였으며 이 항목을 SDGs에서 장애 지위에 따른 세분화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 그룹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제약이 있는 6개 영역을 선정하고 그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하고 있다. 선정된 6개 영역은 ①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seeing, even if wearing glasses?), ②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hearing, even if using a hearing aid?), ③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eps?), ④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⑤ 옷입기 · 목욕하기 · 밥먹기 등 실내 활동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with self–care such as) washing all over or dressing?), ⑥ 의사소통의 어려움(Using your language, do you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for example understanding or being understood by others?)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어렵지 않다(No, no difficulty)', '약간 어렵다(Yes, some difficulty)', '상당히 어렵다(Yes, a lot of difficulty)', '전혀 할 수 없다(Cannot do it at all)'이다. 최종적으로 장애는 6개 영역 중 최소한 1개의 영역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로 결정된다.

한국은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워싱턴 그룹 항목을 포함할 예정으로 현재 시험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에는 워싱턴 그룹 측정 6개 항목 중 ①번부터 ⑤번까지만을 사용하고 있다. ⑥번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신 장보기 · 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이 어려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응답범주도 2개('그렇다', '아니다')로 차이가 있다.

및 장애여부별 비율(지표10.2.1) 등이 그 예이다.

장애 및 이주상태 등에 따른 세분화를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개념정의와 범주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주통계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Migration Statistics)은 이주상태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은 센서스 및 표본조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장애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상자글 참조). 한국에서 장애와 이주상태의 경우 주로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의 조사에서 주로 파악되어 왔다. 앞서 언급된 지표에서 성, 연령 이외에 장애, 이주상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세분화를 위해서는 이 항목을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이주민 집단은 서베이가 어려운 집단(hard to survey) 중 하나이므로 향후 이 집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추정방법 등에 대한 심층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박영실 외, 2016).

셋째, 지표 중에는 한국이 아직 국제기구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제공 가능한 유사 통계가 상당수 있다.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유사통계는 모니터링 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우선 목표 5 성평등 내 지표군이다.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지표 5.3.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 피임방법 사용 비율(지표 3.7.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지표 5.6.1)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부족하게나마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일부 보완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결혼 및 동거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혼연령을 묻고 있는데 이 초혼에는 동거를 포함한 사실혼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성적자기결정권 및 피임 관련 항목의 경우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에서 항목보완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의회 여성의석 비율의 경우 (a) 국회 여성의석 비율과 (b) 지방정부 여성의석 비율 중 전자는 국회를 통해 제출되고 있으나 후자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제공 가능하다.

범죄피해 및 두려움과 관련된 지표군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실태조사(현 국민안전실태조사)로 제공할 수 있다. 전국범죄피해실태조사는 전미범죄피해조사 등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일부 항목

국내에 유사 통계가 있는 지표(승인, 미승인 통계 모두 포함)

지표명		유사통계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예산개요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인구 비율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3.1	노동 단위당 생산규모(농업, 축산업, 임업규모에 따른 계층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토착지위별)	통계청 산림청	농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성, 연령, 고위험군별)	질병관리본부	HIV 신고자현황
3.7.1	가족 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 피임방법 사용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4.b.1	장학금의 ODA 금액 규모(연구분야, 유형별)	한국수출입은행	OECD DAC 보고
4.c.1	(a) 유아, (b) 초등, (c) 중학교 및 (d)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임용 전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조사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 · 폐수의 비율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1.1.1	빈민가, 임시거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이용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발생장소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환경부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2.5.1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4.3.1	합의된 조사 정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수소이온농도(pH)	해양수산부	해수수질실태보고
15.4.1	산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보호구역 지정면적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보호지역통합데이터베이스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의 적색목록 현황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안전실태조사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설계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지표 16.1.4)은 4점 척도(매우 안전-매우 불안전)로 측정될 것이 권고되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어 항목의 수정이나 별도의 추정 기법 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지표 16.1.3)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폭력에 대한 명확한 SDGs 개념정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표준오차가 매우 커서 통계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사규모의 확대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최수형 · 조영오 2017).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지표 16.2.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지표 16.5.1)의 경우에도 경찰청과 대검찰청 통계를 통해 부분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한편,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지표 16.1.1)의 경우 한국은 현재 살인기수건당 1명의 피해자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 수를 과소추정하는 것이다.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목표 6 및 목표 12의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 · 폐수 비율(지표 6.3.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지표 11.6.1),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의 처리 비율(지표 12.4.2),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지표 12.5.1) 등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생산 가능한 통계이다. 폐기물 관련 지표는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이용하여 전체 폐기물량 · 유해폐기물량 · 재활용량 및 비율에 관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유해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가 있으며, 해당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전수 집계된다.[24] 노동 단위당 생산규모(지표 2.3.1)와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지표 2.3.2) 또한 현재 농가경제조사 통계를 통해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이 한 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조정 문제가 제기된다. 범죄 관련 지표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통계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생산 중이다. 국제기구에 어느 기관의 통계를 제공할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지표 16.1.1)의 경우 현재 경찰청 통계로 제공하고 있으나,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도 타살자수가 제공되고 있다. 아직 지표 데이터 생산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 간 조정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질소비량(지표 12.2.2)의 경우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실내공기 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지표 3.9.1)의 경우 환경부,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표 소관을 명확히 해서 해당 데이터 생산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데이터 품질관리가 필요한 지표군

생산된 통계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통계청은 국내 데이터 생태계를 조정하는 책임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생산 · 활용되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통계청의 품질관리제도는 데이터 생태계 조정에서 필수적인데, 승인통계 중심의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국제기구에 제공 · 활용되고 있는 통계에는 승인통계 이외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DB에 수록된 통계를 그 출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승인통계뿐 아니라 통계작성기관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승인받지 않은 통계, 민간기관 작성통계, 연구자료,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25]

현재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지표가 작성된 경우는 여성 관리자 비율(지표 5.5.2), 무보수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지표 5.4.1) 등이다. 이들 지표의 출처는 각각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이다. UN은 표준화된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개별 국가에 확산, 비교가능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계가 노동력조사, 생활시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이다. 이러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국제기구에서 별다른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국제기준의 통계분류체계보다는 국내법 및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편집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4 그런데 이러한 통계들의 경우 배출자 기준의 통계이므로 그 비율이 100%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리비율보다는 변화 추이를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표 협의체(2018년 5월 2일)에서 제기되었다.

25 국내 통계는 크게 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와 비지정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승인통계와 미승인통계로 나뉜다. 비지정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에 민간기관 통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남녀구분 기초위생시설, (g) 기초손씻기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지표 4.a.1)의 경우 OECD가 사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교도소 수용자 중 미결수 비율(지표 16.3.2)은 법무부에서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 중이다.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에서 직접 해당 국가의 대행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지표 4.1.1, 4.3.1, 4.4.1, 4.6.1). 이때, 대행기관이 통계작성기관인 경우와 민간기구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분야(목표 4) 지표의 상당수는 OECD 주관의 PISA, PIAAC 및 IEA 주관의 수학과학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등이 활용되고 있다. PISA와 TIMSS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PIAAC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식량불안 인구 비율(지표 2.1.2)은 월드갤럽폴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색목록지수(지표 15.5.1)의 경우에도 민간경로로 수집된 한국 데이터가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5세 미만 발육부진 비율(지표 2.2.1)과 5세 미만 영양불량 비율(지표 2.2.2)은 연구논문에서 인용되었으며, 국제보건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지표 3.d.1) 등 일부 지표의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다. 특히 후자는 데이터 검증과정에서 아직 경로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지표소관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국내 경로를 추적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그 경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4.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이행수단

SDGs 지표 프레임워크의 국내 활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① 개념정의와 측정산식 등 방법론 개발, ② 지표의 출처가 되는 통계의 개선, ③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렇다면 방법론 개발을 위해, 통계개선을 위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개념정의와 측정산식 등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지표군은 다시 글로벌 수준에서 아직 방법론이 개발 중인 경우, 글로벌 수준에서 작성한 추정 및 모델링 등의 방법론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 국내 맥락과의 부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방법론 개발은 글로벌 표준과 국내 표준과의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노력으로 이행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통계청의 조정, 관리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수준에서 통계작성기관 간 조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국제기구와의 조정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글로벌 표준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할 경우 향후 통계 생산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구성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과 관계부처의 참여가 요구된다. 국제기구에서 이미 채택한 표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방법론의 공개와 데이터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국가로의 데이터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선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 제공 이후 국제기구의 데이터 가공과 활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통계청과 관계부처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공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방법론을 적용한 데이터가 국내의 정책 환경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할 지표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 부처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지표의 공식화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개선이 필요한 지표군에는 기존 통계가 SDGs 정의를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키는 경우, 새로운 쟁점인 이주상태 및 장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념 보완을 통해 유사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통계개선 및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통계의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발굴이 요구된다.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통계를 대체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통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조사데이터뿐 아니라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지리정보데이터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간데이터까지 활용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조사 항목에서 기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주상태나 장애 등의 항목을 포함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부처의 관심과 실질적인 예산투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지표별로 소관부처가 한 곳으로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소관부처가 있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통계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 개의 지표에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관계되는 경우 어느 기관을 소관부처로 할 것인지, 국제기구 자료 제공 책임을 어느 기관에 둘 것

데이터 격차 영역별 대응 방안

영역	쟁점	이행수단
개념정의 및 측정산식 개발이 필요한 지표군	• 글로벌 수준에서 방법론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 글로벌 방법론에 대한 국내 합의가 필요한 경우 • 국가 차원의 정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	•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 국제기구의 데이터 가공과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 방법론 연구 및 투자
통계개선이 필요한 지표군	• 기존 통계가 SDGs 정의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경우 • 데이터 세분화, 특히 장애 및 이주상태에 따른 추가적인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 유사 통계가 있는 경우	• 다양한 데이터 출처 검토 • 이주상태 및 장애 항목 조사 • 통계 소관부처의 명확화
품질관리가 필요한 지표군	• 비공식 데이터의 활용	• 비공식 데이터의 승인 및 품질관리 방안 • 국제기구 제공 데이터의 철저한 모니터링

인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지표군이다. 일단 국제기구에 데이터가 제공되면 다른 국제기구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국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재인용 된다. 따라서 해당 통계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통계로 한정된 품질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승인통계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통계인 경우에는 승인통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내부 자료 등에 근거한 개별 항목만 제공하는 경우나 국제기구에서 직접 민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 승인통계와는 다른 품질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국제기구 자료 제공 절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통계생산기관에서 해당 기구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청에 사후 보고한다.[26] 통계청은 국제기구에서 발표되고 있는 한국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제공된 데이터 값이나 사용된 방법론보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었는지 규모적인 관점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SDGs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에는 통계청 이외의 부처에서 생산된 통계도 통계청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여 수치와 방법론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이 명시되어 있다(IAEG-SDGs, 2018e). 물론 분산형 통계시스템 하에서 통계청이 모든 기관의 통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정기반 강화를 다지기 위해 역량을 배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SDGs 지표에 대한 국제기구의 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 데이터 수집, 보고, 신규 통계 개발 등 파생되는 일련의 절차들이 체계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SDGs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당장은 법과 제도 정비가 어렵더라도 글로벌 지표와 국가지표(K-SDGs 지표)를 한데 아우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다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지표 산출을 위한 국제기구의 방법론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 컨설팅 과정뿐 아니라, 생산된 데이터의 공표와 국제기구 제공 및 모니터링까지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통계 개발과 같은 장기적인 통계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통계 도약의 기회이다.

26 국제기구에 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2015년 99건, 2016년 113건, 2017년 12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SDGs를 기회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8b).

6장

맺는말

전 세계가 모여서 합의한 169개의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232개 지표 중 데이터가 확보된 것은 일부여서 현재 제한적으로만 모니터링되고 있다. SDGs가 채택된 지 3년이 지났다. 우스갯소리로 2030년이 되어서야 모든 통계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서두를 필요는 없겠으나, 지구의 시계가 우리를 기다려 줄까? 데이터 부재로 모니터링조차 할 수 없다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개념정의와 측정산식 개발에서부터 통계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통계청이 관여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에 기반해야 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일로(silo)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표 한 개에 여러 부처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책부처와 통계부처가 이원화된 경우도 있다. SDGs 지표는 서로 다른 목표 간 상호연계성이 뚜렷한 만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SDGs 포용성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그룹으로 구성된 K-SDGs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여 개가 넘는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비공식통계는 귀한 대안적인 출처이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빅데이터를 국가통계와 결합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국가통계작성기관 업무의 일부가 되었으며, 시민생산 데이터(citizen-generated data)에 대한 논의도 걸음마 수준이기는 하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민복 시인의 '하늘을 나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시를 보면 우리의 일상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호출번호를 비롯해서 내 질병의 분류번호, 약국 계산서의 공급처 번호, 택시 번호판 등 숫자들 간의 인연으로 하루가 꾸려지고 있다. 좋던 싫던 간에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숫자들이 모여서 통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은 이러한 숫자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데이터 소양(data literacy)이 낮은 상태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데이터 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고, 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왜곡시킬 수 있다. 통계청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통계를 만드는 이, 그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만드는 이,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민 모두 데이터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7,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고경환 · 장영식 · 임달오 · 최영준 · 고금지 · 김솔휘, 2016, 『UN SDGs 보건 · 복지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김문길 · 김태완 · 임완섭 · 정은희 · 김재호 · 안주영 · 김성아 · 이주미 · 정희선 · 최준영, 2017,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영실 · 박효민 · 이영미 · 김월화, 2016, 『SDGs 지표의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통계개발원.

박영실 · 이영미 · 김석호 · 차은지,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3): 77-96.

박준휘 외 30인, 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사회보장위원회,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신형웅 · 신영석 · 황도경 · 윤필경, 2010,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리 마콜라(Mari Mikkola), 2017, 『섹스와 젠더에 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강은교 외 역, 전기가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 『한국교육과 SDG4-교육 2030』.

유발 하라리(Yubal Harari), 2018,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조현욱 역, 김영사.

윤윤규, 2017, "일자리창출력 제고와 고용영향 평가", 노동리뷰12월호: pp.1-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KEEI 중기 에너지 수요 전망(2017-2022)』.

장은하 · 문유경 · 조혜승 · 김정수 · 김지현,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해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순옥,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문해 및 수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한국교육과 SDG4-교육 2030』, pp.45-58.

조지민, 2018, "양질의 초중등 교육: 국내외 이행현황과 우선과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한국교육과 SDG4-교육 2030』, pp.23-32.

최수형 · 조영오,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실,이승호, 윤옥경, 금용명, 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15, 『위대한 숫자의 역사』.

_____, 2018a, 2017년 사망원인 통계 보도자료.

_____, 2018b, 『2017년 하반기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서』, 내부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국 및 K-water의 대응전략 연구』.

한국통계학회, 1987, 『통계용어사전』, 자유아카데미.

FAO,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Building Climate Resilie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UNDESA,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

IAEG-SDGs, 2017, IAEG-SDG Workstream on Data Disaggregation.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_____, 2018a, Metadata of indicator 1.1.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_____, 2018b. Metadata of indicator 6.1.1. and 6.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_____, 2018c. Metadata of indicator 11.1.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_____, 2018d, Survey on using UNPD data for global monitoring of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_____, 2018e,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o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DG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ILO, 2018,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2019.

OECD, 2017,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 An asse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SDSN, 2018, Global Responsibilities: Implementing the goals.

UN, 1987, Our Common Future.

___,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___, 2017,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___,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WHO and Unicef, 2017, Progress on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ne: 2017 update and SDG baselmes.

주요 용어 약어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공여국 보고체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개발원조위원회)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EEZ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ESS European Social Survey(유럽사회조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식량농업기구)

FGM/C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여성성기절제)

FIES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식량불안경험척도)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고위급정치포럼)

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SDGs 지표 전문가그룹)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국제 기능 · 장애 · 건강 분류)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국제표준직업분류)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세계자연보전연맹)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개발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OOF Other Official Flows(기타 공적자금)

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학습평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수학과학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

UN United Nations(국제연합)

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UN 에이즈합동계획)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경제사회국)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 개발계획)

UN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uncil(UN 경제사회이사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UN 아동기금)

UNP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UN 인구처)

UNSC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UN 통계위원회)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UN 통계처)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자발적 평가보고서)

WCED 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세계환경개발위원회)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WQI Water Quality Index(수질평가지수)

지표 협의체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목록 (가나다 순, 직급생략)

부처 및 산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통계청
-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국립산림과학원 임종수, 국립생물자원관 서재화, 염진화, 이소희, 이수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형욱, 질병관리본부 권상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한국수자원공사 문경호, 민정은, 한국수출입은행 안주혁, 윤소담, 한국환경공단 이태주, 장세훈, 정영란

학계 및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박효민, 서울대학교 홍문숙, 인하대학교 임종한
- 에너지경제연구원 신힘철, 이보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한국개발연구원 이태석, 정대희,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성호, 한국노동연구원 방형준, 손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최현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주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한국행정연구원 정소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최수형
- 서울연구원 정병순,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하정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변용찬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한국위원회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초록우산 박진이, 손희경, 이수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양이원영
- 유네스코 서현숙, 유니세프 성종은

지표 총괄표

- 지표값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글로벌 DB에 수록된 것을 제시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최근 값으로 갱신하였음
- 모든 수치는 반올림하였음
- 티어 분류는 2018년 10월 기준임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절대 빈곤인구를 근절한다.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지역(도시/농촌)별]	0.2%	2012	1	A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별)			1	B	
	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	14.7%	201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합자료
	• 여	16.8%				
	• 남	12.3%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2	C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 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3.1** 사회적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2	A2	
	• 최소 1개 이상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인구비율	65.7%	2016			ILO Social Security Inquiry (SSI)
	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1%	201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유산 · 천연자원 ·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2	C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 인구 비율 (성, 보유형태별)			2	C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심한 사태, 기타 경제 · 사회 ·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2	B	
	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인구 수		2017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사망자 수	7명				
	• 실종자 수	0명				
	• 부상자 수	15명				
	• 이재민 수	8731명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2	B	
	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187,302,271원	2017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1.5.3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	D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2	D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증진 등을 통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한다.	**1.a.1** 정부가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한 국내 재원 비율			3	C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2	C	
	1.a.3 GDP 대비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비부채성 자금유입과 총 보조금의 합			3	D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 · 지역별 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의 경상 및 투자 지출 비율			3	C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2.5	2015	1	A1	FAO, Statistics Division
	유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10.2%	2016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인구 비율			2	B	
	유 식품안정성확보 가구 비율	95.8%	2016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소년, 여아,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비율(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1	C	
	2.2.2 5세 미만 영양 불량 비율(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저체중, 과체중별)			1	C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3.1** 노동 단위당 생산규모(농업, 축산업, 임업규모에 따른 계층별)			2	B	
	유 노동생산성(경지규모)		201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0.5ha 미만	8.1천원/시간				
	• 0.5–1.0ha 미만	16.5천원/시간				
	• 1.0–1.5ha 미만	19.1천원/시간				
	• 1.5–2.0ha 미만	19.7천원/시간				
	• 2.0–3.0ha 미만	25.5천원/시간				
	• 3.0–5.0ha 미만	29.2천원/시간				
	• 5.0–7.0ha 미만	40.6천원/시간				
	• 7.0–10.0ha 미만	42.2천원/시간				
	• 10.0ha 이상	41.9천원/시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토착지위별)			2	B	
	유 농가연간소득(경지규모별)		201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0.5ha 미만	34,319천원				
	• 0.5–1.0ha 미만	33,731천원				
	• 1.0–1.5ha 미만	34,216천원				
	• 1.5–2.0ha 미만	35,857천원				
	• 2.0–3.0ha 미만	40,811천원				
	• 3.0–5.0ha 미만	48,246천원				
	• 5.0–7.0ha 미만	65,746천원				
	• 7.0–10.0ha 미만	78,000천원				
	• 10.0ha 이상	94,291천원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면적 비율			3	C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46종	2018	1	A1	FAO,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DAD–IS)
	2.5.2 멸종위험수준(위험, 비위험, 알려지지 않은)에 따른 지역 품종 비중		2018	1	A1	FAO,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DAD–IS)
	• 위험	43.5%(20종)				
	• 위험하지 않음	8.7%(4종)				
	• 알려지지 않음	47.8%(22종)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a.1** 정부지출 대비 농업생산지수	2.23	2016	2	A1	FAO Questionnaire; UNSD national account estimates
	2.a.2 농업부문 공적투입액(ODA+기타 공적투입액)			1	D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b.1** 농업수출보조금			1	A1	
	농업수출 물류비 지원금	310.5억원	2013			WTO database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2.c.1** 식량가격이상지표			2	C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명의 출생아당 70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3.1.1**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명	2015	1	A1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PD,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5
	유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7.8명	201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1.2 의료전문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출산비율	100%	2015	1	A1	보건복지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명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명, 5세 미만 사망을 1000명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2.1** 5세 미만 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2017	1	A1	UNIGME
	• 전체	3.3명				
	• 여	3.0명				
	• 남	3.5명				
	3.2.2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5명	2016	1	A1	UNIGME
3.3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성, 연령, 고위험군별)			2	B	
	유 HIV 감염 내국인 현황		2017			질병관리본부, HIV/AIDS 신고현황
	• 전체	1,009명				
	• 여	50명				
	• 남	959명				
	3.3.2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77명	2016	1	A1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유 결핵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54.4명	201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000명당)	0.3명	2016	1	A1	DHS2000
	유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1.0명	201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
	3.3.4 B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0.7명	2015	2	A1	WHO, Based on serosurveys at city, subnational or national level.
	유 B형 간염(급성)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0.8명	201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
	3.3.5 소외열대질환(NTD)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	323명	2016	1	A1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3.4.1** 순환계통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30–70세)		2016	1	A1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s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 전체	7.8%				
	• 여	4.7%				
	• 남	10.9%				
	유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19.6명	201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유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53.9명				
	유 당뇨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7.9명				
	유 호흡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63.7명				
	3.4.2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6	1	A1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s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 전체	26.9명				
	• 여	15.4명				
	• 남	38.4명				
	유 자살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01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전체	24.3명				
	• 여	13.8명				
	• 남	34.9명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	C1	
	3.5.2 연간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10.2리터	2016	1	A1	WHO,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인구10만 명당)	12명	2013	1	A1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유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8.1명	201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생식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7.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 피임방법 사용 비율			1	B	
	유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	79.6%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7.2 해당 연령(10–14세, 15–19세) 1000명당 여성 청소년 출산율			2	A2	
	유 15–19세 출산율 (인구 1000명당)	1.3명	201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8.1**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범위	>=80	2015	2	A1	WHO,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		2008	2	A1	Key indicator of the 2017 global report on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유 10% 이상 지출	13.5%				
	유 25% 이상 지출	4.0%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명	2016	1	A1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8명	2016	1	A1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6	1	A1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s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 전체	0.5명				
	• 여	0.3명				
	• 남	0.7명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a.1**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2015	1	A1	WHO Department of the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Secretariat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체	23.9%				
	• 여	6.2%				
	• 남	42.0%				
	유 19세 이상 인구 흡연률	22.6%	2016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전체	6.1%				
	• 여	39.4%				
	• 남					
3.b 개도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b.1**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인구 비율		2016	2	A1	WHO/UNICEF coverage estimates 2016 revision, July 2017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DTP3)	98%				
	• 폐구균백신(PCV3)	98%				
	• 홍역2차예방백신(MCV2)	97%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에 대한 ODA 총 및 순지출액			1	D	
	3.b.3 적당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3	C	
3.c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계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인구1000명당)		2016	1	A1	WHO,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database
	• 간호사	6.9명				
	• 의사	2.3명				
	• 치과의사	0.5명				
	• 약사	0.7명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97.9%	2017	1	C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 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2015	3(a)/ 2(b,c)	A2	OECD, PISA
	• 읽기, 전체	86.3%				
	• 읽기, 여	92.4%				
	• 읽기, 남	80.8%				
	• 수학, 전체	84.5%				
	• 수학, 여	87.0%				
	• 수학, 남	82.3%				
	유 기초학력수준 이상 학생 비율		2017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
	• 국어, 중3	97.5%				
	• 국어, 고2	95.3%				
	• 수학, 중3	93.1%				
	• 수학, 고2	90.8%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			3	C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2015	1	A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전체	90.8%				
	• 여	90.6%				
	• 남	91.0%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및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2012	2	A3	OECD, PIAAC
	• 전체	49.7%				
	• 여	45.4%				
	• 남	54.0%				
	유 형식 및 비형식교육 참여율		2017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전체	29.4%				
	• 여	25.7%				
	• 남	27.6%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직업적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킨다.	**4.4.1** 기술유형별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기술유형별)	60.6%	2016	2	A2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여부별 등)		2015	1/2/3	A1	OECD, PISA
	• 읽기, 성평등지수	1.143				
	• 읽기, 사회경제평등지수	0.820				
	• 읽기, 지역평등지수	1.012				
	• 수학, 성평등지수	1.058				
	• 수학, 사회경제평등지수	0.766				
	• 수학, 지역평등지수	0.986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산술능력 성취를 보장한다.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2012	2	A1	OECD, PIAAC
	• 문해력	97.8%				
	• 수해력	95.8%				
	유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인구 비율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 전체	77.6%				
	• 여	73.4%				
	• 남	81.9%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3	C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a.1**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시설, (g) (WASH 기준) 기초손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100%	2016	2	A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4.b.1** 장학금의 ODA 금액규모(연구분야, 유형별)			1	D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4.c.1** (a) 유아, (b) 초등, (c) 중학교 및 (d) 고등학교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임용 전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2	C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1.1** 성평등 증진 및 법적체계 존재 여부			2	D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 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폭력형태별)			2	C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발생장소별)			2	C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성기절제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2	B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성기절제(FGM/C)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2	C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인식한다.	**5.4.1** 무보수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지역별) • 여 • 남	 14.0% 3.3%	2014	2	A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5.1** (a) 국회 여성의석 비율, (b) 지방정부 여성의석 비율 국회 여성의석 비율	 17%	2018	1(a)/ 2(b)	A2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the database 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5.5.2 여성 관리자 비율	12.3%	2017	1	A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2	C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2	D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 비율(토지 소유권 유형별)			2	C	
	5.a.2 여성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가진 국가 비율			2	D	
5.b 여성권익신장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한다.	**5.b.1** 이동전화 소유자 비율(성별) • 전체 • 여 • 남	 90.0% 87.6% 92.4%	2016	1	A1	ITU World Telecommunication, ICT Indicators database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2	D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98.0%	2015	2	A1	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유 상수도 보급률 • 전국 • 농촌	 98.9% 92.7%	2016			환경부, 상수도 통계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98.5%	2015	2	A1	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유 하수도 보급률		2016			환경부, 하수도 통계
	• 전국	93.2%				
	• 농촌	68.7%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 · 폐수의 비율			2	B	환경부, 하수도 통계
	유 하수도 보급률		2016			
	• 전국	93.2%				
	• 농촌	68.7%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 비율	87.3%	2017	2	A1	Environment Live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6.4.1** 물 이용 효율성의 변화			2	C	
	6.4.2 물 스트레스 수준	57.6%	2014	1	A1	FAO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관리를 이행한다.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0–100)			1	D	
	6.5.2 물 관련 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적 유역 비율			2	D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6.1** 수생태계 규모 변화			2	C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한다.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1	D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6.b.1** 물과 위생 관련 정책 참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	D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1.1** 전기 접근 인구 비율	100%	2016	1	A1	Global Tracking Framework
	7.1.2 청정연료 및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	> 95%	2016	1	A1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2.7%	2015	1	A1	IEA, World Energy Balances
	유 신 · 재생에너지 보급량	14,178,408toe	201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 배 향상한다.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	6.55MJ/USD	2015	1	A1	IEA, World Energy Balances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2	D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7.b.1** 지속가능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 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	D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1.1**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2.4%	2016	1	A1	UNDESA, Statistics Division (AMA)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2.7%	2017	1	A1	ILO estimates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한다.	**8.3.1** 비농업 부문의 비공식 고용률			2	C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8.4.1** 물질발자국, GDP 및 1인당 물질발자국			3	C	
	8.4.2 국내물질소비량, GDP 및 1인당 물질소비량			1	C	Environment Live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8.5.1**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연령, 직업, 장애여부별)		2016	2	A2	ILOSTAT,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 전체	18,786원				
	• 여	14,220원				
	• 남	21,412원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여부별)		2017	1	A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3.7%				
	• 여	3.5%				
	• 남	3.8%				
8.6 2020년까지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6.1** 교육, 훈련 혹은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1	B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 등 포함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7.1** 아동(5–17세) 노동 인구 수 및 비율(성, 연령별)			2	C	
8.8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빈도율(성, 이주상태별)		2016	2	A2	ILOSTAT, Occupational Accidents and Injuries Records
	근로자 10만 명당 발생한 치명적 산업재해 사망자수	5.3명				
	8.8.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의 국가별 준수 수준			3	D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9.1**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의 직접 기여 비율			2	C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의 비율			3	C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1	A1	IMF, Financial Access Survey (FAS)
	•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수	16.3개	2016			
	•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ATM 개수	276.3개	2015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15세 이상) 인구 비율	94.9%	2017	1	A1	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 World Bank.
8.a 최빈개도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 등을 통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a.1**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위한 약정 및 지불액		2016	1	A1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database
	• 약정액	1010.7백만달러				
	• 지불액	562.9백만달러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			3	D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1.1**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3	C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교통수단별) • 항공 – 승객 – 화물 • 철도 – 승객 – 화물	 131,890,017,373(T_km) 11,484,878,507(T_km) 71,325,055,642(P_km) 10,086,403,518(P_km)	2016	1	A1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at the OECD (ITF–OECD)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GDP에서 산업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며,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2.1** GDP 대비 및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율	28.6%	2017	1	A1	UNIDO MVA 2018 Database.
	9.2.2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16.8%	2017	1	A1	ILOSTAT,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9.3 특히 개도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3.1** 전체 산업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	7.3%	2013	2	C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SDBS) database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2	C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upgrade)하고 산업을 개편(retrofit)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9.4.1** 부가가치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	A1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0.34kg/US달러	2015			IEA,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Statistics 2017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 명 당 연구개발(R&D) 종사자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공공 · 민간 연구개발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한다.	**9.5.1**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4.2%	2015	1	A1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9.5.2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	7,045명	2015	1	A1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 기술적 · 기능적 자원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한다.	**9.a.1** 인프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 지원(ODA+기타공적공급)			1	C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 · 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63.7%	2015	1	C	UNIDO CIP 2016 Database
9.c 최빈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c.1** 무선 네트워크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기술별)	99.9%	2016	1	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증가율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C		
	유 지니계수(처분가능 소득 기준)		201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 시장소득	0.353				
	• 처분가능소득	0.304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 경제 · 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성, 연령, 장애여부별)			B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 비율			C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비율	58.9%	2017	C		ILOSTAT – AMECO estimates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5.1** 금융건전성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C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6.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D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 비율			C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D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을 이행한다.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D		
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자금 거래를 장려한다.	**10.b.1** 개발 재원 흐름[공여국, 수원국, 재원형태별(예: ODA,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2016	D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경로를 철폐한다.	**10.c.1** 총 송금액에서 대비 송금비용 비율			C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1.1** 빈민가, 임시거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1	B	
	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2017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2	B	
	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42.8%	2016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이용 비율			2	C	
	11.3.2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 비율			3	D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3	C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총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2	B	
	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인구 수		2017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사망	7명				
	• 실종	0명				
	• 부상	15명				
	• 이재민	8,731명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1	B	
	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187,302,271원	2017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인다.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2	C	
	11.6.2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예: PM2.5, PM10)			1	B	
	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016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 PM10	46㎍/㎥				
	• PM2.5	26㎍/㎥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용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3	C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발생장소별)			3	C	
11.a 국가, 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peri-urban)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 · 사회 · 환경 연결을 지원한다.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및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도시크기별)			3	D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1.b.1**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	D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2	D	
11.c 최빈개도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 ·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율			3	D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2.1 개도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국가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2	D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발자국			3	C	
	12.2.2 국내 물질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1	C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3	B	
	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1일)	14,389톤	2016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 당사국 수			1	D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3	B	
	유 지정폐기물 발생량(1년)	5,034,948톤	2016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5.1**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			3	B	
	유 폐기물 재활용 비율	85.7%	2016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3	C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D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에서 주류화된 정도			3	C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 ·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a.1** SCP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개도국 지원 금액			3	C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 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갖추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 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			3	D	
12.c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12.c.1**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액 및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대비 보조금 비율			2	C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한다.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2017		B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인구 수					
	• 사망	7명				
	• 실종	0명				
	• 부상	15명				
	• 이재민	8,731명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D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이행하는 지방정부 비율				D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온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등을 포함)				D	
	유 온실가스 배출량		201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총 배출량	694.1백만톤 CO2eq.				
	• 순 배출량	649.6 백만톤 CO2eq.				
	• 에너지	604.8 백만톤 CO2eq.				
	• 산업공정	51.5 백만톤 CO2eq.				
	• 농업	21.2 백만톤 CO2eq.				
	• 폐기물	16.5 백만톤 CO2eq.				
	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3.5톤 CO2eq.				
	유 실질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59.7톤 CO2eq./10억 원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3.1** 기후변화 적응, 완화, 영향 저감, 조기 경보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의 수				D	
	13.3.2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온 국가의 수				D	
13.a 가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온전한 운영, 의미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 투명성이라는 배경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천억불을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선진국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13.a.1** 약속된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한 2020–2025년 모금액(연도별)				D	
13.b 여성, 청년, 지역사회외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을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도모한다.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기술, 역량배양을 비롯한 특별지원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수				D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14.1.1**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3	B	
	유 해안쓰레기 현황		2017			해양환경공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 플라스틱	3,835㎏				
	• 그 외	5,958㎏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고자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으로 조성하기 위해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			3	C	
14.3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14.3.1** 합의된 조사 정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수소이온 농도(pH)	8.16	2017	3	A1	해양수산부, 해수수질실태 보고
14.4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적어획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1	C	
14.5 2020년까지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를 보전한다.	**14.5.1** 전체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			1	B	
	유 해양보호구역 면적	1777.4km^2	2018			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생태정보나라 해양보호구역 현황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 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14.6.1**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2	D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14.7.1** 군소도서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3	C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양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a.1** 전체 연구 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0.3%	2013	2	A1	Country submission for Ocean Science data and UIS for R&D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적용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척도			2	D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의 158번 항을 환기하면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체계를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4.c.1**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3	D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63.2%	2015	1	A1	FAO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 육상 • 담수	 36.6% 36.8%	2017	1	C	Birdlife International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도모하고, 개발을 위한 산림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한다.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진전			1	D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 훼손에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3.1** 전체 국토면적 대비 훼손된 토지면적 비율			2	C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을 보장한다.	**15.4.1** 산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보호구역 지정면적			1	C	
	15.4.2 산악 지역 녹색피복지수	96.3	2017	1	A1	FAO
15.5 자연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을 예방한다.	**15.5.1** 적색목록지수 유 한국의 적색목록 현황 • 멸종우려	 533종	 2018	1	B	 국립생물자원관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장려한다.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	D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한다.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2	C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priority species)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	**15.8.1**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와 통제에 대한 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국가 비율			2	D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 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 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한다.	**15.9.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 2(생물다양성 가치 통합)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3	D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현저하게 증대한다.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3	D	
15.b 모든 원천과 모든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보전과 재조림 등 산림 관리를 진척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3	D	
15.c 지속가능한 생계의 기회를 추구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함과 더불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지구적 지원을 강화한다.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2	C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연령별)	0.72명	2015	1	A2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유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415명	201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현황			3	C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2	B	
	유 폭력범죄피해율	0.4%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구, 전국범죄피해조사)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3	B	
	유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	20.7%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구, 전국범죄피해조사)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2	C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2	C	
	16.2.3 성인(18–29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2	C	
16.3 국내 ·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2	C	
	16.3.2 교도소 수용자 중 미결수 비율	35.6%	2016	1	A1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UN–CTS)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3	C	
	16.4.2 무기 중 불법성이 확인된 비율			3	C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2	B	
	유 뇌물수수 공무원수	297명	201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 비율			2	C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섹터별 혹은 예산코드별)			1	C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3	C	
16.7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	**16.7.1** 공공기관 보직 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주요 인구집단별)			3	C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그외 인구집단별)			3	C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8.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1	D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9.1** 5세 미만의 출생 신고 비율(연령별)			1	C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2	C	
	16.10.2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D	UNESCO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특히 개도국의 제도를 강화한다.	**16.a.1**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1	2017	1	D	OHCHR and GANHRI.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3	C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1.1**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재원별)			1	C	
	17.1.2 예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			1	C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GNI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의 규모를 GNI 대비 최소 0.2%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 지출 비율	0.14%	2017	1	A2	OECD, DAC Statistics database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을 동원한다.	**17.3.1** 정부예산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1	C	
	17.3.2 GDP 대비 송금액 비율(US달러 기준)	0.45%	2016	1	A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	C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D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 · 남남 · 삼각협력 등의 지역적 · 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특히 UN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증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합의에 기초한 지식공유를 증대한다.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형태별)			3	C	
	17.6.2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40.5명	2016	1	A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개발 · 이전 · 보급 · 확산을 촉진한다.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금액			3	C	

세부목표	지표	값	최근 연도	글로벌 티어	국내 티어	출처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92.8%	2016	1	A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7.9 남북 · 남남 · 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17.9.1**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가치(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1	C	
17.10 도하개발 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 보편적 · 규칙기반 · 개방적 · 비차별적 · 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	D	
17.11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을 두 배 증가시킨다.	**17.11.1** 전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1	D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 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한다.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	D	
17.13 정책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3	C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3	D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사용하는 정도			2	C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1	2017	2	D	OECD and UNDP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 민관 ·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17.17.1** 민–관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미달러 금액			3	C	
17.18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8.1**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3	D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	2017	2	D	PARIS 21
	17.18.3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통계계획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재원별)	1	2017	1	D	PARIS 21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	C	
	17.19.2 a)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였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1	2015	1	D	UNSD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발행인 전영일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8층
집필진 박영실 · 이영미 · 김인겸
인쇄일 2019년 4월 29일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디자인 동그란북
제작처 숨쉬는책공장

● Goal 1. NO POVERTY ● Goal 2. ZERO HUNGER ●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Goal 4. QUALITY EDUCATION ● Goal 5. GENDER EQUALITY

●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Goal 12.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Goal 13. CLIMATE ACTION

● Goal 14. LIFE BELOW WATER ● Goal 15. LIFE ON LAND ●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9 772288 116605 08
ISSN 2288-1166